

세지연 국제학총서 | vol.3

초저출산 시대, 한국사회를 다시 묻다

김은기/ 김종만/ 박선경/ 유광석/
이소훈/ 최현우/ 한정선/



서문 - 인구감소라는 렌즈로 다시 읽는 한국사회

21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급변을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은 오랜 기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절벽’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재의 실존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감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인구의 전반적 감소는 단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 체계, 공동체의 형태, 제도의 방향성 전반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 수의 감소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둘러싼 담론이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 담론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즉, 본서는 통계적 외양 너머의 층위를 탐색한다. 제도와 정책의 틈새에서 경험되는 정동성(affectivity), 신앙, 젠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인구 감소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는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상상력과 가치의 재편,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인구감소’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결을 읽어내려는 시도다.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감정 경제의 전개, 아동의 사회적 의미 변화, 여성과 가족 구조의 재편,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적 경험, 저출산 담론의 젠더적 한계, 종교 지형의 변화, 초연결 사회에서의 신체성과 같은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진다. 인구라는 숫자 속에는 삶의 궤적, 문화의 전환, 제도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내포되어 있다.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시켜 왔다. 여성의 몸은 재생산의 도구로 환원되었고, 다문화 가족은 ‘동화’라는 이름 아래 획일적 정체성으로 길들여졌다. 인구 위기 담론은 때로 보수적 성 윤리와 전통적 가족 규범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변화된 가치관, 종교적 감수성, 가족의 재정의, 감정노동의 과잉, 아동의 의미에 대한 문화적 재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층위가 얹혀 있는 복합적 현상이다.

이 책은 여섯 편의 주요 연구와 서평을 통해 인구감소라는 주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한다. “값을 매길 수 없어 값비싼 아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경제적 자산에서 정서적 중심으로 전환된 근대 이후의 변화를 상징한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역사와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탐구한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 실패 사례는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성찰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논의는 일상적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로서의 접근을 제안한다. 종교와 인구감소의 상관관계를 다룬 장에서는 신앙이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초연결 사회에서의 브리콜라주적 몸’이라는 주제는 출산과 삶이 기술적 존재론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며, 새로운 생애 경로와 신체 감각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본서는 단일한 관점에 의존하지 않는다. 제도 비판, 정동 분석, 젠더 이론, 종교 사회학, 문화 일상성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인구 감소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집필과 서평에 참여해주신 모든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주제가 우리 시대에 필수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신 여러 학자들의 연대가 이 책을 가능케 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한정선 학장님, 김은기 교수님, 박선경 교수님, 이소훈 교수님, 서울교육대학교 최현우 교수님, 경희대학교 유광석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도 정성을 다해 원고를 편집하고 이 책을 세상에 선보여주신 안복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편집자 김종만

Contents

서문 - 인구감소라는 렌즈로 다시 읽는 한국사회	2
들어가는 말	6
	김종만(경희대)
값을 매길 수 없어 값비싼 아이	8
	이소훈(고려대)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 위기 주류 담론의 성인지적 빈곤함	20
	박선경(고려대)
인구 혁명과 종교 지형: 출산율이 형성하는 신앙의 미래	29
	김은기(고려대)

초저출산 시대, 한국사회를 다시 묻다

통합적 문화적응으로 가는 길	37
최현우(서울교육대)	
현대 일본과 저출산 사회	40
한정선(고려대)	
초연결사회의 인구감소: 브리콜라주 몸을 중심으로	49
유광석(경희대)	
나가는 말: 다시 공동체를 상상하기	67
김종만(경희대)	

들어가는 말

김종만(경희대)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어려운 시대다.”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줄어드는 건 단지 수가 아니다. 의미, 소속, 미래도 함께 감소한다.”

한때 대한민국은 ‘인구는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출산을 장려하고, 때로는 강요했다. 그 구호는 수십 년이 지나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뉘앙스가 다르다. ‘아이를 낳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결혼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경고는 절박하면서도 어딘가 어긋나 있다. 출산율 0.72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낳지 않기’ 때문에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인구 감소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풍경을 다시 그려보고자 한다. 인구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며 제도이며, 신앙이며 문화다. 우리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왜 이토록 많은 정서와 비용을 투자하게 되었는가? 출산율 담론은 왜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가? 종교는 감소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외국인 여성은 어떻게 한국 사회의 ‘가족’이 되는가? 1인 가구는 어떤 방식으로 돌봄과 연결을 구성하는가?

이 책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을, 제도 비판과 감정 분석, 종교 사회학과 젠더 이론, 그리고 문화적 일상성 분석을 통해 입체적으로 바라보려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감소하는 사회’에 대해 비판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공존과 윤리,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 이 책이 그 물음에 조금이나마 길을 비춰 줄 수 있기를 바란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과 고령화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 수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형태, 젠더 역할, 신체와 노동의 의미, 종교적 공동체, 그리고 일상 문화의 구성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구 관련 연구는 주로 인구 통계학, 경제학, 정책학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감소를 둘러싼 담론은 수치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삶의 조건과 가치관, 문화적 재현과 감정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 사회현상으로 접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비혼·비출산 확산, 종교적 소속감의 약화, 1인 가구 증가 등은 인구감소가 단일한 인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서는 ‘인구감소’라는 현상을 다양한 학문적 렌즈를 통해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 여섯 명의 연구자가 각기 다른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관련된 주제를 분석한 글들을 엮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가 수치와 정책의 문제가 아닌, 가치·문화·신체·정체성·종교 등의 교차적 공간에서 형성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중심이 된다. 첫째는 다문화가정의 일상적 생활 문화는 어떻게 구성되며, 이들은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가? 둘째는 일본의 저출산 정책 실패 사례는 한국 사회에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가? 셋째는 기술과 초연결성의 사회에서 인간의 신체는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과 생애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는 한국의 초저출산 담론에서 젠더 불평등은 어떻게 은폐되거나 배제되고 있는가? 다섯째는 출산율과 종교성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으며, 종교는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섯째는 아동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의 아동관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본 연구는 단일한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고, 질적 사례 분석, 비교문화 연구, 이론적 서평, 사회사적 고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를 둘러싼 기존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사회적·종교적·젠더적 층위를 아우르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정책 결정자와 학계,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인구감소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값을 매길 수 없어 값비싼 아이

서평: Zelizer, V. 1985. Pricing the Priceless Child: The Changing Social Value of Childr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소훈(고려대)

들어가며

나는 가족과 함께 10대에 캐나다로 이민한 후, 얼마 안 되어 우리가 정착한 한인 교회의 교인들이 온엄마에게 조언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집사님, 캐나다에서는 아이를 때리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이 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내가 한국에서 성장한 90년대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아동에 대한 체벌이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파리채, 당구대, 땀감용 장작, 주먹 꿀밤 등, 도구도 참 다양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엄마가 나를 때리면 “잡혀간다”는 사실은 당시 나에겐 상당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20년 후, 어느덧 부모 세대의 나이가 되어 한국에 돌아오니, 지금 한국인 아동은 30년 전 나의 아동기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내 또래 친구들에게서나, 텔레비전에서 아동 양육의 모습을 보자면 아이를 때려서 훈육하는 것이 “한국 문화”라고 설명되었던 시기가 과연 있었는가 싶었다. 내가 자랄 때 “문제 아동”이라고 불리며 “두들겨 맞았을” 법 한 아동들은 “금

쪽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심리 상담가의 치료를 받고, 유명한 심리상담가는 부모의 양육 환경이나 그들의 개인사에서 아동 문제행동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이는 세상에서 돌도 없는 귀한 존재가 된 듯했다.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의 아동 양육의 영역에서 일어난 문화적 전환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문화적 전환은 인구학적 전환과 동시에 나타났다. 내가 태어난 80년대까지 이어졌던 산아제한 정책은 80년대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는 90년대에 출산 정책을 급선회하며 갑자기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지만, 반등은 없었다. 귀하게 태어난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모두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많은 정책 연구 보고서가 이들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높은 양육 비용을 저출산의 이유로 들었다.

금(金)쪽이도 귀(貴)해진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부모의 일자리 등 소득의 이유와 값비싼 양육 비용이라는 별 새로운 것 없는 신문 기사가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시대에, 비비아나 젤리저(Viviana Zelizer)의 오래된 고전 *Pricing the Priceless Child*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이 책의 전체 제목은 *Pricing the Priceless Child: The Changing Social Value of Children*으로, 한국에 번역되어 출판되지 않았지만, 제목을 번역하자면 <<금쪽같은 아이 가격 매기기: 변화하는 아동의 사회적 가치>>가 어떨까. 영어단어 “Priceless(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와 “Pricing(값 매기기)”을 병렬배치 하여 말장난처럼 보이는 제목은 아동의 경제 및 감정적 가치의 변화에 대한 저자의 관심을 보여준다. 저자는 미국 사회에서 1870년대부터 1930년대가 아동의 ‘가치’에 관한 사회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시기라는 점에 집중한다. 이 시기를 지나 아동의 가장 큰 ‘가치’는 경제적이 아닌 감정적인 (sentimental) 성격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주는 기쁨과 보람, 또 자녀의 존재 자체가 주는 감동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누가 자녀의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 당황할 것이다. 젤리저는 사료 분석을 통해 아동의 감정적인 가치가 19세기까지 서구사회에 널리 퍼진 통상적인 인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19세기에만 해도 아동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것에 반해, 20세기부터는 아동은 경제적으로 쓸모없지만(economically useless) 감정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emotionally priceless) 존재라는 인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57). 그는

이 같은 사회 인식적 전환의 계기가 보건학적(예를 들면 영아사망률의 감소)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기 미국의 경제 구조적, 인류학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 그리고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가 아동을 “신성화(sacralization)”하는 문화 형성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19세기 미국 사회에서는 아이의 출산이 집안의 미래 일꾼이자 부모의 노후대책으로 이해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동시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농촌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천지였고,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손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거나 가난한 가정의 어린아이를 일꾼으로 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도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860년대 이후 미국 도시들도 빠르게 공업화되면서 가난한 가정의 아동은 새로운 노동자 집단으로 부상했다. 1870년 미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여덟 아동 중 한 명은 고용된 상태였다. 아이들이 노동과 소득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은 불과 몇십 년 후인 20세기 초에 완전히 뒤바뀐다. 아동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반대로 아동 양육이 가정경제의 대표 지출 품목으로 부상한다. 저자인 젤리저는 묻는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젤리저가 말하는 돈과 감정의 깊은 관계

저자 비비아나 젤리저는 프린스턴대의 사회학과 교수로, 경제적 교환관계와 인간관계의 관련성을 살피며 경제의 도덕적, 사회적 의미에 관해 중요한 개념을 선보인 독보적인 경제사회 학자이다. 그는 여성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모든 달러는 똑같다 (a dollar is a dollar)”는 경제학적 관념에 대항하여 돈의 다양한 사회적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 경제학과 사회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를 해 왔다. 이 서평이 다루는 저서 <<Pricing the Priceless Child>>는 1985년에 출판되었으며, 1979년 출판된 생명보험을 다룬 그의 첫 저서와 함께 그의 초기작으로 꼽힌다. 그는 학자로서 일평생 사회 역사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경제적·비경제적인 것들이 개인과 집단의 삶에서 어떻게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되는지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그에게 19~20세기 전환기에 보인 아동의

가치에 대한 극적인 사회 인식 변화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는 이 저서뿐만 아니라 후기 저서에서도 경제적 교환과 가치가 사회적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주목하며, ‘진심’과 ‘돈’의 이분법적 구분을 인위적이고 허구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¹⁾ 그는 이 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경제와 감정적인 가치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p.11)이라고 보는 시각, 즉 아동이 경제적으로 “쓸모 있거나” 아니면 “쓸모없거나” 양자택일로 보는 시각이 허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 저서에서 더 자세히 정리된 “적대적인 세계들(hostile worlds)”과 “연결된 세계들 (connected worlds)” 개념보다는 다소 거친 것이지만, 그래도 그의 초기 영감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이후 저서에서 그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경제적 교환과 가치가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인식은 그 영향을 애써 가리는 경향이 있다고 관찰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정주부로 집안일을 하는 아내가 차린 근사한 식사를 마치고 “감사의 의미로” 현금 팁을 제공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는 분명 매우 어색한 광경일 것이며, 아내가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면 남편의 현금 팁은 환대를 받았겠지만, 식당 주인과 달리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식사를 차린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젤리저는 이와 같이 “사랑”과 “돈”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감정적인 관계에 금전적인 요소가 침입하였을 때 생기는 “불편한 감정”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교환의 방식이 사회적 관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위 이야기의 남편이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일 년에 한 번 근사한 장신구를 선물한다면 어떨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그 장신구의 값이 일 년 치 팁을 합친 것과 똑같은 액수라 한다고 말이다.

저서 <<Pricing the Priceless Children>>은 시장의 역할에 주목한다. 사회적 의미가 가격(price)과 가치(value)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며 아동과 같이 감정적인 가치만 있을 때, 금전적 가치인 가격을 시장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묻는다. 이 책은 개념적 틀과 배경을 제시한 서론에 이어, 아동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견인한 사회적 사건들인 아동의 교통안전과 아동 노동을 다룬 1~3장과 사회 가치 변화에 따라야 했던 제도 개혁을 다룬 4~6장으로 구성된다. 4~6장에서는 아동의

1) Zelizer, V. (2005) *The Purchase of Intim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Zelizer, V. (2017) *The Social Meaning of Money: Pin Money, Paychecks, Poor Relief, & Other Currenc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해야 했던 생명보험, 손해배상 소송기관, 아동복지 기관이 아동의 사망보상금과 입양과 관련한 비용이 어떻게 제도화 되었는지를 다룬다.

아동 안전과 도덕성: 아이를 길거리와 공장이 아닌 학교로

1장에서 2장은 미국 사회가 아이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계끔 일련의 사건들에 집중한다. 1장은 1903년 메리 마이너라는 이름의 5세 여아가 뉴욕 맨해튼 3번가에서 전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 작은 소요 사건으로 번진 것으로 시작한다. 당시 뉴욕은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아동의 놀이공간은 감소하는 데 비해 전차와 자동차 등 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은 늘어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했다. 이러한 아동의 길거리 죽음은 공개적이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빈번했기 때문에 절규하는 가족의 외침으로 순식간에 군중이 폭도로 돌변하기 십상이었다.

젤리저는 아동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19세기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18세기까지 영국과 유럽에서 유·영아의 죽음은 공개적인 애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며, 부유한 집안조차 묘비 없이 매장하는 것이 빈번했다. 심지어 사고사를 죄 때문에 “신이 내린 벌”이라고 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중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에는 아동의 이르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매우 비통한 일이 되었으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의학의 발달로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아동 심리, 올바른 모성과 양육법(mothering)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도시의 아동 교통사고의 원인이 놀이공간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은 놀이터 만들기 운동으로 번졌고 아동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만들어졌다. 경찰은 아이들의 길거리 놀이를 금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매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철도회사와 보험회사가 여러 사업의 자금을 댔다.

아동이 사고에 의해 사망하면 출신 지역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를 애통해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노동 계층이나 이민자의 가정 출신일 때 이들의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지 않은 곳에 방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애당초 뉴욕의 좁은 공동주택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보장

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도시가 비대해지며 유입된 노동 계층과 이민자의 숫자만큼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놀이터와 실내 놀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경찰이 오면 놀이를 멈추고 탄 짓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놀이 공간을 잃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길거리 자동차뿐만이 아니었다. 1900년 미국 인구총조사는 10~15세 아동의 1/6이 근로자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0세 미만과 가정 내 부모(특히 어머니)의 하도급 근로를 돕는 아동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의 공장 노동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사회 풍경이었다, 1790년 로드아일랜드에 처음 생긴 방직공장의 첫 노동자는 7~12세 아동 9명이었으며, 1820년 어린 아동은 로드아일랜드 방직공장 노동자의 대부분이었다. 작고 민첩한(nimble) 손가락을 가진 아동 노동자는 당시 새롭던 큰 기계 중심의 산업 체계에서 적격이라고 여겨지며 아동 노동자들은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20세기 중반 전까지 가정경제의 “부 소득원”은 여성이 아닌 아동이었다.

이러한 19세기 아동 노동의 ‘호황’에 19세기 말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여론이 반대로 돌아선 듯 보였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당위적인 아동 노동의 비도덕성을 확립하는 데에 반세기의 세월이 걸렸다고 저자는 기록한다. 그가 자세히 묘사하는 아동 노동 개혁가 집단의 구성과 그들이 반대 세력과 논쟁하는 지난한 과정도 흥미롭다, 그가 “쓸모 있는 아동의 변호 세력”이라고 부르는 집단은 각종 각양의 논리로 아동 노동을 옹호했다. 이른 노동은 빈곤 예방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게으르지 않은 성실한 미국형 자수성가 남성을 훈련시키고 응석받이를 예방하는 등 도덕적 이익이 상당하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동 노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들은 20세기 초부터 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1930년대에는 많은 주 의회가 이러한 법안을 제정 및 논의하였다. 아동 노동의 비도덕성은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전파되었고, 그들이 이민자집단이나 노동계급이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한 비하적인 시선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중산층 계급은 아동은 생산의 도구가 아니며, 오직 감정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아동 노동 개혁 집단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반면에 노동계급과 이민자의 가정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아동 노동 제한 법률 제정의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만연해 있는 아동의 노동 중 어떤 것을 금지해야 하고, 어떤 것이 허용 가능한지 구분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었다. 예를 들어, 아침 신문 배달은 신체운동에 도움이 되고 근면함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적당한 일이라고 여겨졌고, 반면 아동의 공장 노동은 비도덕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농장 노동에 관해서는 시각이 갈렸다. 특히 가족 단위 농장에서는 “적당한” 일과 “아동 착취적” 일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집에서 하도급(out work)으로 일하는 어머니를 돕는 아동의 노동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아역 배우 등 문화계 아동 종사자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문화계 아동 종사자는 혹독한 훈련을 받는 서커스 단원부터 영재 음악가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했고, 1930년대는 셜리 템플(Shirley Temple)과 같은 아역배우가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고소득을 누릴 때였다. 이들의 예술 행위가 공장의 아동 노동과 같이 규제의 대상인지에 대해 중산층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1930년대 이후에도 논의는 한참을 이어졌다. 긴 논란 끝에 아동의 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 그 일의 성격이 교육적이며, 비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사회문화 인식적 결론이 났다. 즉, 아동의 “근로”는 불법이지만, 통학 시간과 교육 시간이 보장되고, 인성 발달과 좋은 습관 기르기 등 교육효과가 있는 아동의 일은 법과 도덕성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었다. 아이들에게는 “임금”이 아닌 적당한 “용돈”이 주어지는 것이 올바른 양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용돈은 아동의 일과 금전의 불편한 관계를 알맞게 가릴 뿐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를 교육하는 데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였다. 어쨌든 “쓸모없는 아동” 옹호자들의 완전한 승리였다.

달라진 아동 가치에 흔들리는 생명보험, 손해배상 소송, 입양기관의 계산법

4장~6장은 앞선 장에서 설명된 사회적 문화 인식 변화에 따라 19세기에 나름의 방식과 이유로 아동의 가치를 매겼던 세 가지 분야의 기관들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다룬다. 아동의 사망에 보험금을 지급하던 생명보험, 사고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tort) 법원, 그리고 입양을 주재하던 사회복지기관이 그 주인공이다.

미국에서 18세기 후반부터 생명보험이 보급되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한 세기 후인

1875년에서야 푸르덴셜 생명보험사의 상품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대대적으로 노동자 계급에 대대적으로 보급되던 “산업 보험”의 일종이었다. 미화 약 100달러의 보상금을 가졌던 아동 생명보험은 장례(혹은 매장, burial) 보험으로 기능했다. 이 상품은 시작하자마자 대흥행이었다. 노동자 계급 가정을 집집마다 돌며 보험을 판매하고 매달 보험금을 걷 방문판매원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판매 개시 1년 만에 푸르덴셜 외 두 곳의 보험사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았다.

비슷한 시기에 아동 생명권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의 아동 구제 운동단체가 발족하였다. 젤리저는 아동 생명보험의 개시와 아동 구제 운동의 발족 시기가 비슷한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두 가지 사건 모두 그 당시 부쩍 가시화된 아동 노동의 잔혹함이라는 공통 원인을 갖는다는 점에서 필연일지도 모르겠다. 중산층의 시각을 가진 아동 구제 운동가들에게 아동 생명보험은 배격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는 존엄한 아동의 사망을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비도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제 많은 노동자 계급과 이민자의 아동 양육 방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자 계급은 자녀의 죽음으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돈을 위해 아동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아동 생명 보호 옹호자에게는 또 다른 도덕성의 잣대가 작동하고 있었다. 젤리저는 19세기 말 아동 장례의 유행은 새로운 문화이며, 이는 아동의 이른 죽음을 애도하며 큰 비용을 들여서 절차를 차렸던 중산층 계급의 문화를 노동자 계급도 수용했다는 증거라고 짐작한다. 아동 구제 운동가들의 날 선 비판과는 달리 노동계급 부모들이 장례 후 챙길 수 있는 보험 보상금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부모들은 장례 업체들이 보상금 액수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이들에게는 아동 생명보험이 귀한 아이의 감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현대적 안전장치로 받아들여졌다.

아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개혁은 불법행위 민사소송(tor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사법기관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아동에 대한 피해보상금 액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부득불 아동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환산해야 했다. 19세기 아동의 경제적 가치는 그들의 현재 및 미래 가계경제 기여도에 기반하여 계산되었고, 그것은 아동의 근로소득, 집안일 및 어린 형제 돌봄의 경제적 기여도, 또 미래 소득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소송과정을 의미했다. 세기 말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볼 때, 교통

사고 등으로 아이를 갑자기 잃은 부모에게 이러한 방식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며, 사법체계에서 통용되던 계산식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경제적 기여도가 없던 중산층 아동의 죽음에 어처구니 없이 적은 액수가 계산되는 사건이 줄을 이었고, 당연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지난 세기의 계산법이 쓸모 없어지고, 아동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태도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시각이 완연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액수를 산정해야 했던 법원은 다양한 시도와 판례를 만들어 냈으며, 이는 독자들이 읽기에 매우 흥미진진한 것이다. 책 구석구석 꼼꼼한 사료분석으로 발굴한 흥미로운 사례와 켈리저의 통찰력 있는 분석방식이 빛나는데, 6장은 특히 더 그렇다.

이 책에서 가장 역설적인 부분은 아동 입양을 다루는 7장이다. 켈리저는 대중 담론에서 아동의 경제적 가치가 비도덕적으로 치부되며 사라지는 바로 그 시기에 아동 입양 “시장”이 생성된 것을 관찰한다. 19세기 말 전까지 미국의 탁아소는 야만적인 이름인 “아동 농장 (baby farm)”이라 불렸는데, 거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혼외자를 맡아 키우며,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를 맡기며 적은 비용을 지불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누구도 반세기 후, 입양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기꺼이 높은 비용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입양”의 모습은 19세기 말에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일손이 필요한 사람과 원하지 않는 아이를 처리해야 했던 사람 사이 일종의 교환이 빈번했지만, 그것이(금전 거래가 오가지 않더라도) 인신매매에 가깝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고아들에게 사랑이 가득한 “진짜 집”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아동의 노동력에 기댄 수양부모(foster parenting)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 등 아동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지출은 수양부모가 받는 보조금을 계산하고 제도화하는데 일조하였다. 입양아의 “상업적 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인기가 좋은 아이는 특정되었다. 19세기에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진 3세 이하 영아(특히 푸른 눈을 가진 갓난쟁이) 고아는 20세기에는 “감정적인 가치”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여아 고아의 인기에 대한 켈리저의 서술은 6장의 여아 사망 손해보상금 계산법만큼이나 흥미롭다.

저자는 6장을 마무리하며, 훗날 법의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양아를 거래하는 암시장의 생성을 아동의 감정적 가치 중심의 입양제도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저자가 책을 집필했던 당시는

1975년 상원의원 조사가 미국 내 매해 5000명 이상의 영아 암시장에서 거래됨을 밝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그가 20세기 초 감정적 가치 중심 입양제도가 확립된 것과 20세기 말 아동 암시장에서 일어나는 암거래를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21세기에 와서 영아와 고아의 노골적 시장화 경향이 더 심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아”의 초국적 입양과 시험관 아기 등 인공 생식 기술은 친밀 산업(intimate industries)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불임 커플에게 팔리는 정자와 난자 등에는 공여자의 인종, 교육 수준, 외형 등에 따라 가격표가 매겨지고, “디자이너 베이비”가 만들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²⁾ 이처럼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이”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시장에서 값이 매겨진다는 역설은 현재도 유의미하다.

젤리저는 아동을 금전적 가격표와 분리시켜 신성화하는 20세기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세기 말 문화적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경제적 가치가 비도덕적인 시각으로 치부되고 감정적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제적 의미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비가시화하고 전용했을 뿐이라고 관찰한다. 그 이유는 후 저서에서 더 명확해 지는데, 경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적 의미는 상호의존적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알맞은 경제적 교환관계 확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술한다.³⁾ 이러한 그의 주장은 21세기 글로벌자본주의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가장 친밀한 부분까지 상업화한다는 Boris와 Parreñas 등의 주장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지만, 경제적 생산관계가 모든 관계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들의 시각과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다.⁴⁾

나가며: 가족관계에 대한 경제 사회적 연구를 위하여.

서평을 마무리하며, 도대체 백 년 전 뉴욕 사람들의 아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2) 이와 관련한 연구는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Eileen Boris와 Rhacel Salazar Parreñas가 엮은 *Intimate Labors: Cultures, Technologies, and Politics of Care* 에 수록된 Laura Briggs와 Rene Almeling의 챕터를 추천한다. Boris, E. & Rhacel Salazar Parreñas, R.S. (2010) *Intimate Labors Cultures, Technologies, and the Politics of Car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3) 위의 각주 1

4) 위의 각주 2

가 현재 한국 사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젤리저의 책이 가진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나는 고작 몇백 년 밖에 되지 않는 미국의 정착 식민주의적(settler-colonial) 역사를 한국의 근대사에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젤리저의 주장에 중심축 역할을 하는 아동 근로자가 그림자만 남은 20세기 이후에서야 공업 노동을 유입한 한국의 상황은 그가 말하는 사회 변혁적 시기의 뉴욕과는 아주 다르다. 19세기 말, 아동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이끈 것은 뉴욕이 공업도시로 성장하며 대거 동원된 아동 노동자와, 이들이 불편했던 중산층의 새로운 문화와 도덕적 가치였다. 그러한 기저에서 생명보험, 손해보상 법원, 아동 사회복지 기관이 기능하며, 아동에 대한 바뀐 가치를 수용하여 제도화하였다. 현대 한국 사회는 피식민 경험과 급속한 근대화로 경제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총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 가족 전통과 성별 역할 기대의 끈적끈적한 점착성과 함께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육과 관련한 사회문화 인식의 변화를 경제 사회학적, 사회사적으로 연구하려면 젤리저의 책 몇 배가 되는 두께의 서적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젤리저의 접근방식과 연구방법은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저출산의 퍼즐에 “금전적 요인”이라는 뻔한 이유를 몇 십년 째 되풀이 하는 한국 학계에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양육, 자식의 사회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그 필요성을 두 번 말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쓰는 “K-장녀”라는 표현을 살펴보자. 내가 보기에, 이 재미있는 표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장녀에 대한 “예전” 시각과 기대가 가족관계에서 발현되거나, 장녀 자신의 내면에 존재 하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풍자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예전” 인식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옛날은 아니다. 1960~80년대, 젊은 여성이 새로운 공업노동력으로 부상했을 시기, 10대 중·후반-20대 초반의 큰 딸이 도시의 공장에 취업하여 가계 경제 및 어린 동생들의 학비 등을 대느라 본인의 꿈과 학업 등을 뒤로 미룬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녀의 의미는 여성의 희생이라는 일종의 “전통적인” 가치에 기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도시화, 공업화 등 대단히 현대적인 변화에 따라 진화한 가족 내 경제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K-장녀 중에 70년대 장녀처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 조부모 뒷바라지와 동생들의 학비를 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정 경제와 가족 내 교환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완전 바뀌었을 뿐 아니라, 노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 새로운 사회보장 및 금융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바뀐 것은 21세기 새 세대뿐만이 아니다. 70년대, 어린 나이에 가족의 뒷바라지를 하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6~70대가 되었는데도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고령인 그들의 부모를 부양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식 세대가 부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퇴직”한 후 몸이 아픈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 요양보호사”의 자격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아이러니는 도대체 어떤 역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⁵⁾

현대화의 변동과 사회체계의 역동 속에서 가족 내 관계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했고, 가정의 안과 밖에서 추동된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양한 양상으로 급변하는 가족관계의 정 중앙에 있어왔다. 이는 젤리저가 누누이 강조하는 사회 경제학 접근과 젠더 의식적 접근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변수 몇 개의 상관관계를 들어 숫자만 가득한 빈곤한 설명이 아니라, 사회성과 문화성을 덧발라 튼실하게 살을 붙인 사회문화적 설명이 나오기 까지 하루가 아쉬운 이유이다.

5) 박재병 (2021) “[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2021.11.03.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0634> (2025년 4월 7일 마지막 접속)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 위기 주류 담론의 성인지적 빈곤함

서평 도서:

조영태. 2016. 『정해진 미래』 서울: 북스톤.

조영태. 2021. 『인구미래공존』 서울: 북스톤.

조영태·장대익·장구·서은국·허지원·송길영·주경철. 2024.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서울: 김영사.

박선경(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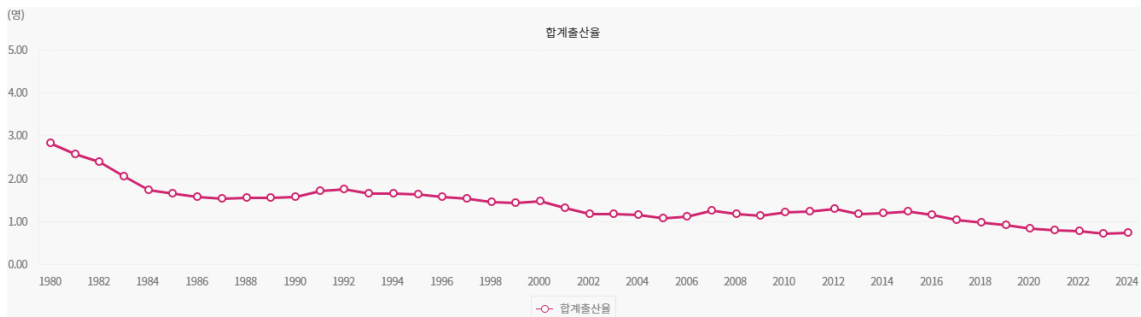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이다. 이러한 한국의 초저출산율은 그 수준이나 지속 기간 면에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황인도 외 2023). 첫째, 수준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2021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이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구자료 기준 상 전세계 217개 국가 중 최저출산율이다. 둘째, 저출산의 지속 기간이 매우 길다. OECD가 정의하는 저출산의 기준은 합계출산율 2.1 이하이고, 초저출산의 기준은 1.3 이하인데, 이미 1983년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6이어서 저출산사회에 돌입한 지 벌써 40년째이며, 2002년부터 출산율 1.18을 기록한 이후로 줄곧 22년째 초저출산율을 지속하고 있다.

다행히 희망적인 수치가 2025년 2월의 통계에서 발견되었다.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5로 2023년의 0.72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 보면 2023년의 23만 명에서 2024년에 238,300명으로 약 8,300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우연일까 혹은 정책적 노력의 결실일까? 2025년의 증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출산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낙관해도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림 1]의 합계출산율의 추세를 보자. 이미 1983년에 저출산 국가의 기준인 합계출산율 2.1보다 적은 2.06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이다. 1988년에서 1992년 사이 소폭 상승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 하락해서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9로 저점을 찍었다. 이

후 2~3년 간격으로 하락하다가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는 방식의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소폭의 증가도 전혀 없이 2023년까지 쭉 하락한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2024년 한 해만의 합계 출산율 증가를 두고 안심하기 이르다. 2015년 이전의 증감을 다시 반복하는 정도가 된다면 겨우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감의 반복 패턴을 벗어나 일정 수치의 안정적 유지 혹은 상승이 생길 때 초저출산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세, 1980-2024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러나 2024년도의 합계출산율 상승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며 심지어 벌써부터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정도이다. 예를 들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은 언론 기고 글을 통해서 출산율 반등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 때문이며 중앙정부가 발을 맞춘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하모니’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주형환 2025).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중 구체적으로 무엇이 2024년도의 출산율 반등을 만든 원인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2024년 만의 한시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인지, 혹은 지속적 증가를 이끌어낼 만한 근본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없이 성급하게 정책 성과를 확신하고 홍보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특히 초저출산 현상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 성과들이 제시한 초저출산의 원인과 비교해볼 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말로 초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본 서평은 현재의 정책 방향이 초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만한 좋은 대안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주류적 해결책으로 제시된 원인분석과 정책 제안 방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

히, 초저출산 현상 원인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정책대안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앞으로의 성 평등한 발전을 담보하는 방향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서평의 대상은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룬 책 중 대중적으로 많이 회자되었던 세 권의 책으로 한정한다.

세 권의 책은 모두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의 책으로, 조영태는 인구문제를 연구한 학자 중 정부와 언론에서 가장 많이 호명되는 인구문제 전문가이다. 2016년에 나온『정해진 미래』(이하 2016년 책으로 통칭)에서 조영태는 당시 한국이 맞닥드린 인구위기 문제를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써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017년 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 매일경제 2017을 여는 책, 2016 한국경제 올해의 경제경영서 등 각종 도서상을 받았다. 2021년에는『정해진 미래』의 후속작『인구 미래 공존』(이하 2021년 책으로 통칭)을 내서, 2016년 이후 변화된 패턴에 기초한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적 진단을 내어놓았다. 이후 조영태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공동자문위원장(2022-2022),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미래경제분과위원(2022-202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2022-2024)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부 주요 자문직을 맡으며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정부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여섯명의 학자들과 함께『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이하 2024년 책으로 통칭)라는 공저를 내기도 했다. 이 정도라면 한국에서 인구와 초저출산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 중 가장 주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조영태의 책 세 권 모두 인구문제 분석 자체에 있어서는 비전공자인 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충분히 뛰어난 책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이 책은 인구학의 고전과 검증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 인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쉽게 잘 제시하여 한국 인구 변동의 특징과 현재의 인구 위기 국면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구문제에 대한 일반인이 가질만한 쉬운 질문들을 먼저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구가 줄어든다면 대학입시가 쉬워지냐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입시로 보면 그렇지만 인서울입시로 한정하면 그렇지 않음을 2016년과 2021년 책 모두에서 쉽게 잘 설명하고 있다. 또 이론적으로 복잡할 내용들도 쉽게 잘 설명하고 있어서, 대중서와 학술전문서적 간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책 파트1의 6장 “인간 본성에서 찾아본 초저출산의 원인”을 보면 인구학의 고전인 멜서스와 다윈의 논리를 간단히 설명한 후, 이 학자들이 한국의 초저출산 통계를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상상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두 고전의 이론적 함의를 한국의 인구 특징에 대입한 후, 저자의 해석을 최신 연구인

러츠(Lutz et al. 2006)나 승(Sng et al. 2017)의 연구가 제시한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검증해서 한국 인구위기의 원인과 함의를 도출해낸다. 2024년의 공저에서는 2021년 책보다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멜서스와 다윈의 논리를 한국현실에 적용하여 서술했다.

세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일관적이라는 점도 좋다. 메시지 중 첫 번째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단순히 우리 사회에 좋다 혹은 나쁘다의 이분법적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 지역, 산업별로 각기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6년 책 1장부터 4장이나 2021년 책 파트1 전체 내용이 인구 급감의 불평등한 양상을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해 도출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앞으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입시, 취업, 재테크 등 개인적인 선택은 물론이고 기업의 제품 투자 및 시장개척이나 국가의 정책 결정 등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인구학적 관점을 적용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메시지가 주는 실용적 유익함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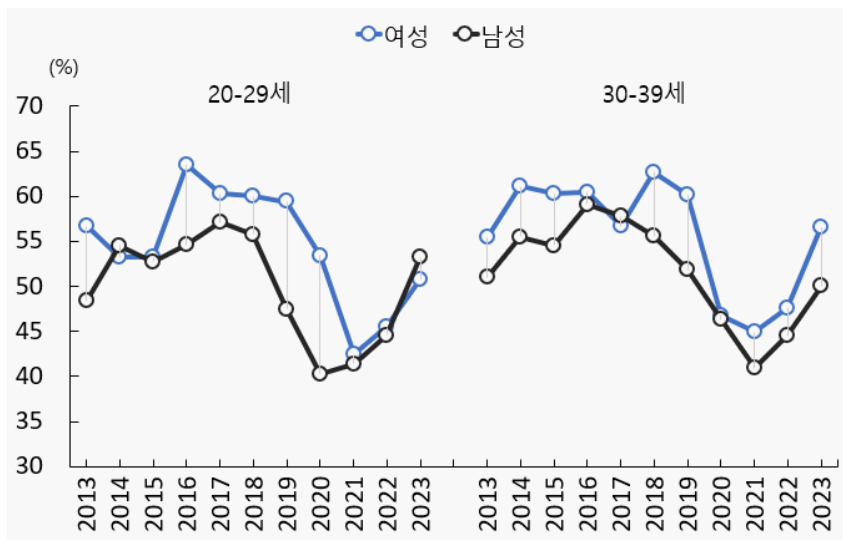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영태의 세 책이 과연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균형있게 분석한 책인가를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부정적이다. 세 책 모두 초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인 20~40대 청년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압박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혹은 결혼과 출산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성별과 무관한 공통의 요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초저출산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했다고 평가받는 한국은행의 보고서(황인도 외 2023)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이 초저출산의 미시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개인 수준의 분석결과,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낮았고, 인구밀도를 대리지표(proxy)로 사용하여 경쟁압력을 측정한 집단수준 분석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조영태의 2021년 책 파트1나 2024년 공저 내 장대익의 챕터와 조영태의 챕터에서도 인구밀도와 인구편중을 초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세대가 동일한 구조적 경쟁압력을 느낀다고 해서, 이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내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자의 적응방식이 과연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할까? 만약 결혼과 출산의 선택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느끼는 의무의 종류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면, 문제의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도출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청년이 같은 종류의 경쟁압력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위와 같은 필자의 비판이 경험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보기 위해 우선 청년세대들의 선호

가 성별에 따라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몇 가지 공인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자. 우선, 청년세대 내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한 인식부터 다르다. [그림 2]와 [그림 3]은 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4』 중 ‘XI 사회통합: 청년세대의 젠더격차’ 챕터의 내용 중 일부이다(박선경 2024).¹⁾ [그림 2]는 성별에 따른 대우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2030 청년 세대의 응답 비율을 성별에 따라 구분한 그림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모든 시점에서 청년 여성들이 청년 남성들보다 성별에 대한 대우가 더 불공정하다고 비관적으로 느낀다. [그림 3]은 본인이 지난 1년간 성별 혹은 임신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2022년 조사 결과이다. 이 역시 여성들의 불이익 경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청년 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도 자체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결혼과 출산과 같은 삶의 중요한 결정에 큰

[그림 2] 청년세대의 성별에 따른 불공정 대우 인식,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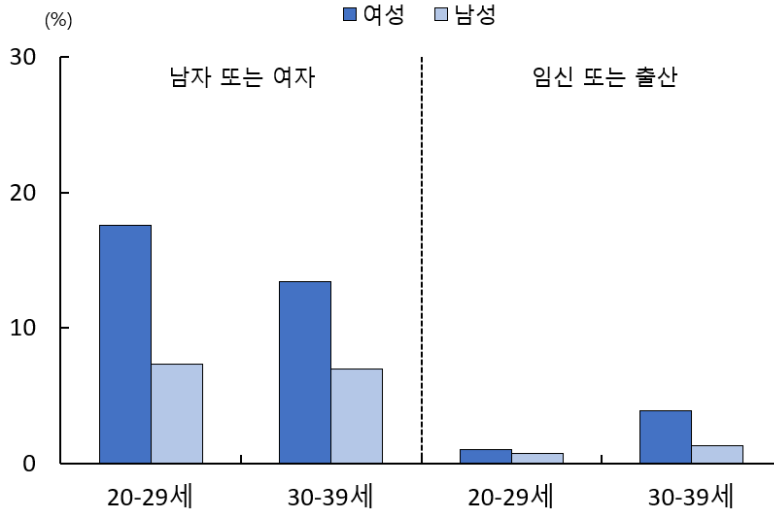
주: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대우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공정하지 않다’ 혹은 ‘별로 공정하지 않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박선경(2024, p.341)에서 재인용

1)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꾸준히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로, 한 해 약 8,000 명의 응답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 조사이기 때문에 여타의 설문조사보다 자료의 크거나 질 면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영향을 치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청년세대의 성별 및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경험, 2022



주: 통계치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자 또는 여자’라는 항목과 ‘임신 또는 출산’이라는 항목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2. 박선경(2024, p.341)에서 재인용

앞선 분석처럼 청년세대가 성별에 따라서 느끼는 불공정성의 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쟁압력의 내용도 다르다면, 이들이 삶에서 우선시하는 목표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동향 2024』 ‘XI 사회통합: 청년세대의 젠더격차’ 챕터가 다른 또 다른 국가승인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 보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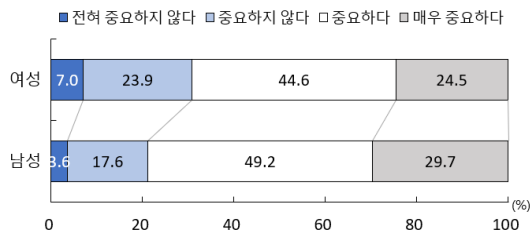
[그림 5]는 다양한 삶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이다. 설문지에 제시된 총 아홉 개의 항목 중 성별에 따른 응답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인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 좋은 사람들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기여만을 그림으로 제시했다. 좌상단의 결혼에 대한 중요성인식과 우상단의 자녀출산과 양육의 중요성 인식을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 중에서 결혼, 자녀출산과 양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크다. 결혼이 중요하지

2)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9세~34세 사이 청년 총 1만 4,966명을 대상으로 하나 조사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국가승인통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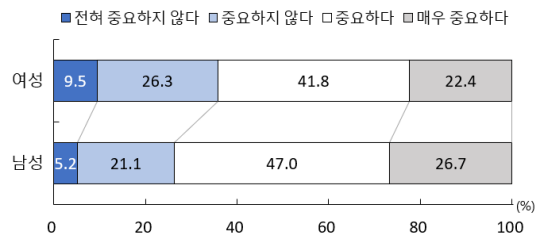
않다고 응답한 청년여성은 30.9%인 반면, 남성은 21.2%이다. 자녀출산과 양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여성 역시 35.8%인데 반해, 청년남성은 26.3%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하단에서 보듯이 사회 기여에 대한 응답은 정반대이다. 사회 기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73.4%이고 남성은 70.4%라서, 사회기여를 중시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다.

[그림 5] 청년세대의 성별 삶의 중요성 인식,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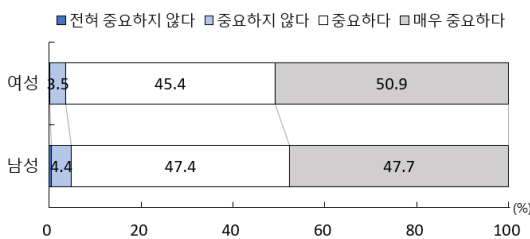
1)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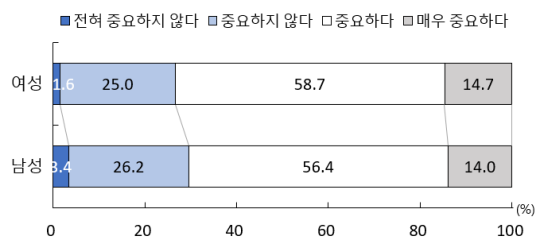
2) 자녀 출산과 양육



3)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4) 사회 기여



주: 통계치는 만 19~34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하가 바라는 삶에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박선경(2024, p.341)에서 재인용

위의 조사 결과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청년 여성들은 성별에 따른 사회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있고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있었다. 본 서평에서 인용한 조사자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청년 남성의 경우 청년 여성과는 다른 종류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상이한 선호와 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진단과 정책제안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필자의 비판에 대해 저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자. 한 권의 책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구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기본 관점에 충실한 책이라고 저자는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은 세 가지 면에서 공허하다. 첫째, 저자는 2021년의 책에서 가구 다양성과 세대 구분의 축을 통한 총 14개의 세그먼트를 제시한다. 세대별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 혹은 3인 이상 가구의 구성이 다른 현실을 잘 반영한 유형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면 왜 성별과 세대 축을 통한 세그먼트는 만들지 않는가? 혹은 14개 세그먼트에 대해서 성별 축을 추가해서 27개 세그먼트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가?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세그먼트 구성이 이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한국의 인구통계자료 상 충분히 정량분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축은 왜 빠져있는지 의아하다.

둘째, 저자가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위기에 대한 진단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데 세부 전문 분야 상의 차이로 한계가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2024년에 총 7인의 저자와 공저한 책에서 충분히 여성학적 관점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다룬 연구자를 포함하여 책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책 표지에 명시했듯이 초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한 ‘대한민국 지성계 최초 융합 프로젝트’라고 자랑하면서 젠더적 관점을 다룬 챕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부를만한 성 불균형이다.

셋째, 초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인구학 내 연구 중 성인지적 관점을 잘 보여준 연구도 경시하고 있다. 2021년 책에서 저자 스스로가 맥도날드(McDonald 2000)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면서 가정 내 성평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맥도날드(McDonald 2000)의 연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내려가지만 가정에서의 지위가 높으면 출산율 하락이 정지하고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저자 스스로도 이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당 연구에 대해 2쪽 정도를 할애한 것 외에, 2021년 책 전후 어디에서도 더 이상 사회 내 성평등이나 가정 내 성평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즉,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결과를 한국 인구 특징에 적용한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조영태의 책들이 가진 장점을 볼 때, 이 책들에서 드러난 성인지적 관점의 빈곤함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다. 세 책 모두 인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초저출산과 인구 위기의 전반을 거시적으로 잘 보여준 책이고, 이 책의 대중적인 파급력이 높았기 때문에 저자가 지금의 초저출산 해결 정책결정 과정에 일정 정도 기여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만약 초저출산 현상 원인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서술했다면, 이후 정책 방향 역시 보다 성 평등한 방식

의 해결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2024년 소폭 반등한 합계출산율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증가라고 낙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참고문헌

- 박선경. 2024. ‘XI 사회통합: 청년세대의 젠더격차’ 통계개발원 편 『한국의 사회동향 2024』 통계청.
- 주형환. 2025. “[시론]지역의 힘, 출산율 반등의 열쇠.” 국민일보 2025년 3월 18일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3666?sid=110> (검색일: 2025년 3월 20일)
- 황인도 외. 2024.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2023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 중장기 심층연구』 한국은행.
- Lutz, Wolfgang, Vegard Skirbekk and Maria Rita Testa.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167-192.
- McDolan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427-439.
- Sng, Oliver, Steven Neuberg, Michael Varnum and Douglas Kenrick. 2017. “The Crowded Life Is a Slow Life Population Density and Life History Strate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5):736-754.

인구 혁명과 종교 지형: 출산율이 형성하는 신앙의 미래

필립 젠킨스. 2020. 『출산율과 신앙: 인구 혁명과 세계 종교의 변형』. 텍사스 웨이코: 베일러 대학 출판부(*Fertility and Faith: The Demographic Revolu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ld Religions* by Philip Jenkins, 2020.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김은기(고려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녀 수가 줄어들고, 종교에 대한 관심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여 필립 젠킨스는 인구 통계의 변화, 특히 출산율 하락과 세계 종교의 변화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저명한 비교종교학자이자 종교사학자인 그는 유엔 인구국(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출산 사회는 종교적 열성이 높은 반면, 저출산 사회에서는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책의 대부분은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인구 변화 양상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데 할애된다. 젠킨스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주요 종교의 성격과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폭넓게 다룬다.

그는 출산율과 종교적 신앙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인과 관계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두 요소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어느 한쪽이 반드시 다른 쪽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젠킨스는 실존적 안보 이론(existential security theory)을 비롯해 여성의 교육 및 고용 기회, 피임 접근성, 이민, 도시화, 사회복지, 대중매체, 도덕관, 성소수자 권리 인식의 변화 등 종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특히 그는 두 가지 핵심 요인에 주목한다. 첫째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다.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 수준, 의료 및 가족계획 자원 접근성, 취업 기회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종종 종교가 여성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와도 연결된다. 둘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실존적 안보 수준이다. 젠킨스는 피파 노리스와 로널드 잉글하트가 저술한 ‘신성함과 세속성: 전 세계의 종교와 정치’(2004)를 인용하여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성이 향상되고 위생 및 의료 개선되며, 취업 기회와 피임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더 이상 많은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14쪽). 동시에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개인화된 의미와 삶의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 즉, “사회가 복지, 교육, 건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킬수록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그에 따라 종교의 영향력도 약해진다”(114쪽)는 것이 젠킨스의 설명이다. 젠킨스는 미국이 실존적 안보 이론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종교적 믿음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 중 종교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는 서유럽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약하다는 등의 다른 사회학적 요인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서유럽에서 시작된 출산율 하락과 종교 참여 감소의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된 과정을 설명한다. 2부는 정치적 요소를 더하여, 출산율 차이가 종교적, 정치적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분석한다. 특히 각국의 발전 속도와 양상의 차이가 이러한 갈등의 배경이 된다고 본다.

1장은 저자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인구 통계적 변화와 종교적 참여 감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저자는 이 장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지역사회의 출산율(평균적으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그 사회의 종교적 열의와 헌신의 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현대 아프리카 대부분의 경우처럼 출산율이 높은 사회는 종교적으로 더 열렬하고 독실한 경향이 있다. 반면, 출산율이 낮고 가족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적 또는 제도적 종교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이 커진다. 출산율은 종교적 행동과 헌신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척도를 제공한다(3쪽)

젠킨스는 “출산율 저하가 종교성 감소를 촉진하며, 이로 인해 종교적 열정이 저하되는 상호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14쪽). 그는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가 “초기 세속화와 제도적 종교 쇠퇴를 알리는 경종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3쪽).

2장에서는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시작된 출산율 하락이 종교적 관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제2차 인구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식량 공급 확대, 식품 관리 개선, 물 공급 및 하수 처리, 그리고 개인위생의 발전과 같은 공중 보건의 향상이 질병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기대수명을 증가시켰으며,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1960년대의 인구 변화가 종교 실천의 급격한 감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유럽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세속적인 대륙이 되었다. 그는 특히 자신을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소속(“religious nones”)이라고 여기는 유럽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하며 종교적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정치” 혹은 “개인적 정치”(“the politics of the personal,” “the personal is political” 혹은 “the private is political”), 즉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¹⁾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의 삶과 정체성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흐름이 두드러졌음을 강조한다.

4장은 20세기 후반에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출산율 감소와 이에 따른 종교성 변화를 분석한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출산율 감소는 종교 기관이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광범위한 종교적 변화로 이어졌다. “유럽적 추세”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의 빠르게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국가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이후 남아시아, 특히 태국과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서구화”가 아닌, 유사한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흐름에 의해 나타난 전형적인 변화였다.

1) “개인의 정치”라는 구호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문구로 요약된다. 이는 우리 삶의 가장 개인적인 문제들조차 정치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문구는 남성 중심의 “정치 영역”과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전통과 관습에 도전하는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 후반 제2차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대중화되었으며, 시민권 운동, 학생 운동, 흑인 권력 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5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를 자랑하며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만, 동시에 가장 종교적인 나라 중 하나인 “수수께끼 같은” 미국을 다룬다.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출산율을 보여 왔다. 이 장에서는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을 논의하는데, 거대한 지리적 크기, 분권화, 중앙 집중형 방송의 부재 등이 포함된다. 젠킨스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현재 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총출산율 2.1)보다 크게 낮아졌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유럽 인구 혁명과 유사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종교 및 문화 혁명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98쪽)이라고 주장한다.

인구 통계적 변화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패턴을 고수하고 있다. 6장은 이러한 고출산 사회를 다루며, 이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가능성을 살펴본다. 젠킨스는 2050년까지 세계 기독교 인구에서 아프리카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국에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한다(128쪽). 그는 또한 이러한 고출산 패턴이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유럽에서 관찰된 세속화 추세와 대조된다고 지적한다. 젠킨스는 비슷한 요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의 급속한 성장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7장은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이 이슬람 국가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유럽 수준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2계층 이슬람”(“Two Tier Islam”)의 확대되는 격차를 설명한다. 이 장은 이슬람 세계 내 출산율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를 확실히 바라보는 서구 관찰자들의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출산율과 가족 규모는 ‘유럽’ 성격이 강한 국가와 전통적인 국가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란이 그 예에 해당한다. 1983년 이란의 총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6.5명이었으나, 현재는 1.7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8장에서는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인구학적 불균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

터키,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 정치가 종교와 출산율을 어떻게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핀다.

결론에서는 출산율과 종교성의 관계가 미래 사회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성찰한다. 종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리와 윤리 체계를 재해석하고, 성, 젠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출산율이 매우 낮은 사회에서 종교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젠킨스의 논의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여러 저서들과도 비교된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간략히 언급된 에릭 카우프만(Eric Kaufmann)의 『Shall the Religious Inherit the Earth?: Demography and Polit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2011)는 인구 통계적 추세, 특히 종교 집단의 높은 출산율이 세계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그는 종교 집단의 높은 출산율이 서구 세속화 과정을 역전시키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결국 그들이 지구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대교 내 출산율이 높은 극단적 정통파는 21세기 중반까지 자유주의 유대인을 넘어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출산율과 종교성 간의 관계를 다루는 또 다른 책은 존 미클스웨이트(John Micklethwait)와 애드리언 울드리지(Adrian Wooldridge)의 『God Is Back: How the Global Revival of Faith Is Changing the World』(2010)이다. 이 책은 종교의 세계적인 부활이 정치,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출산율이라는 주제를 폭넓게 다루지는 않지만, 종교적 성장의 맥락에서 인구 통계적 추세를 분석한다. 저자들은 종교 공동체의 높은 출산율이 그들의 성장과 영향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며,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종교 집단이 세속적 인구보다 높은 출산율로 인해 확장되고 있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들 책은 인구 통계와 정치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높은 출산율과 이민으로 인해 종교 인구가 세속 인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젠킨스의 책은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독

특하다. 그는 각 지역의 데이터와 사례를 활용해 인구 통계적 및 세속화 추세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진정으로 글로벌한 이해를 제공한다. 젠킨스의 책은 복잡한 인구 통계적 변화와 종교적 개념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의 높은 출산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이 책은 높은 출산율이 문화적 또는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많은 국가의 출산율이 유럽 국가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럽의 ‘무슬림 점령’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 교육 향상, 의료 접근성 확대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며, 출산율과 경제 개발 수준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출산율과 종교성 간의 자주 간과되는 연관성을 밝혀내며, 세속화와 종교적 역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젠킨스는 세속화가 전통적인 가족 관점을 재정의하고 더 작은 가구나 대안적 가족 구조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 변화와 세속화의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한다. 또한, 세속화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종교적 무소속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책은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세속화, 무종교인의 증가가 세계 종교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매우 시의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탐구한다. 또 하나의 강점은 사회학, 인구 통계학, 역사, 종교 연구의 통찰을 결합하여 학제간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으로, 특정 분야의 고정 관념을 넘어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제시한다.

물론 이 책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첫째, 비서구 지역에 대해 서구적 틀로 분석을 시도하면서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의 종교 정체성은 매우 유동적이며 서구식 설문조사로는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저출산과 세속화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연결지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경제 발전, 교육, 도시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출산율 하나만으로 종교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한국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단지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며, 그 원인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여러 요인으로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중 많은 요인이 유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유교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의 영향이 강한 한국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그리고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결합되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유교는 교육과 직업적 성공에 중점을 두며, 이는 부모와 미래의 부모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한다. 자녀의 학업적·직업적 성공을 위해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압박은 부를 필요로 하며, 이는 결혼과 가족 형성을 늦추고 저출산을 초래한다. 셋째, 유교는 여성이 개인적 목표보다 가족과 가사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고등 교육과 직업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에게 갈등을 일으켜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어 많은 여성이 자녀를 적게 낳거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 넷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가 변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기보다 개인적 자유와 경력을 우선시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교적 가치가 강조하는 개인적 성취의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육아휴가와 육아 지원 같은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촉진하는 현대적 정책과 충돌한다. 이로 인해 부모, 특히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 유교적 성 역할, 높은 양육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에서 보다 세밀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인구 변화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인구학, 종교학, 사회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뤄지는 학제 간 탐구로서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

참고문헌

- Kaufmann, Eric. 2011. *Shall the Religious Inherit the Earth?: Demography and Polit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Profile Books.
- Micklethwait, John and Adrian Wooldridge. 2010. *God Is Back: How the Global Revival of Faith Is Changing the World*. New York: Penguin Books.
- Norris, Pippa and Ronald Inglehart. 2004. *Sacred an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통합적 문화적응으로 가는 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다문화생활교육센터. 2017.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생활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최현우(서울교육대)

“조선족 결혼이민여성보다 한족 결혼이민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족과 조선족 결혼이민여성 모두 자녀의 학습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녀 양육 역량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족, 한족 결혼이민여성의 약 85~9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자신감이 낮게 보인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p.163-4).”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다문화생활교육센터에서 2009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인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생활문화’는 베트남과 중국,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이들 가정의 생활문화를 소개한다.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생활문화의 개념과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동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대중서이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생활문화와 다문화가족’은 생활문화의 의미와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조사 방법과 내용을 소개한다. 가족의 일상을 주도하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출신국의 문화와는 이질적인 한국의 일상 생활문화를 어떻게 영위하고 있으며 본국의 문화와의 통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주 관심사로 밝히고 있다.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주한 개인이 자국의 문화와는

또 다른 문화적 집단과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경험하는 상호변화의 과정인 문화적응의 개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를 비교 분석한다.

‘제2장 가족생활문화와 자녀양육’에서는 한국-베트남, 한국-일본, 한국-중국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여성의 가족가치관, 자녀양육과 부모의 역할, 문화적응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의 남성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점수가 낮은 등 비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생활에서나 사회의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가족중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중심 가치관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의생활문화’는 베트남과 일본, 중국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적응이 그녀들의 의복소비행동과 한복과 자국의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 의복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 영역에 있어 세 나라의 결혼이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의복소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과 일본 출신 여성들은 생활문화에서 의복의 사회적 역할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한족 결혼이민여성들은 치파오를 한국인들에게 전달하려는 태도가 높은 반면 한복에 대한 수용태도는 낮았으나, 일본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복을 수용하는 태도는 높았지만 기모노를 전달하려는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여성들이 한일 양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 식생활문화’에서는 한국-베트남, 한국-일본, 한국-중국 다문화가족의 전반적인 식생활양태를 이들의 식이행동과 한식에 대한 태도, 식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에서 일주일에 5~6일 또는 거의 매일 한식으로 식사하고 있으며, 출신국 음식을 먹는 경우는 주 1~2회이거나 더 낮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직접 조리를 하다 보니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영양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남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보니 연령이 높은 배우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식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론’은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베트남과 중국, 일본에서 결혼이민한 여성들은 한국의 생활문화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 양육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남편이나 시부모의 의견에 순종하거나 본인의 전통 음식을 먹고 전통 복식을 입고 전통 명절을 기념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드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통합적인 문화적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 책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and 다문화가족의 생활문화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그렇지만, 자료의 해석에 있어 의문이 드는 점도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음식을 사 먹기에 수월한 환경에 있음에도, 남편에게 맞춰 제한적으로만 구입하고 주체적인 식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본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함께 근무하면서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강인한 여성들로, 모국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질은 떨어지는 모국 식재료나 음식을 구입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2024년 12월 23일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의 출산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생활문화, 특히 자녀양육문화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은 흔치 않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자신감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취학 자녀의 학습 지도를 위한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며 어떠한 부분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지원해야 효과적인 출산 지원 정책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 일본과 저출산 사회

야마다 마사히로 저. 김경희 역. 2021.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결혼·출산을 회피하는 진짜 원인』 서울: 제이앤씨.

한정선(고려대)

일본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57 쇼크”라는 단어가 출현한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57 쇼크”는 합계출산율이 전후 최저였던 1968년의 1.58을 밑돈 수치가 1989년 통계에서 파악되면서 1990년부터 유통된 용어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인구학 용어인데, 합계출산율 2.07을 밑도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며, 저출산이 장기 지속되면 인구감소가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소자화(少子化)’와 ‘고령화(高齡化)’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고,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웠다.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는 일본 최초의 종합적 저출산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젤플랜(1994), 그리고 이후의 신엔젤플랜(1999), 저출산사회 대책대강(2004), 신육아안심플랜(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이후 30년 이상 합계출산율 1.6을 밑도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는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일련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야마다는 1990년대 이래 지속해서 일본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양적, 질적 사회 조사를 하면서, “저출산의 일본적 특징”을 발견하였고, 이와 같은 일본적 특징을 간과한 정부의 대책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야마다가 발견한 저출산의 일본적 특징은 무엇일까?

야마다에 의하면, 일본 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증가하는 만혼, 나아가

미혼 인구이다. 즉 결혼하는 인구의 감소이다. 이는 혼외 출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일본의 경우는 더욱 저출산 경향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16년 전체 출생아의 2.3%인 극소수만이 혼외 출생이었다. 반면에 결혼을 하면 두 자녀를 갖는 성향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되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출생동향기본조사』에 의하면 “결혼 지속 기간 15-19년 부부가 낳은 평균 자녀 수”는 2005년까지 2.09였고, 이후 2010년 조사부터 감소하여 1.96(2010), 1.94(2015)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에 기반하여, 야마다는 “일본에서 미혼자는 거의 아이를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즉 미혼율이 상승하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내려간다”고 보았다(야마다 마사히로 2021, 40-41).

따라서 야마다는 누가, 왜 결혼하지 않고 있는가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미 1997년 니케이신문(日経新聞) 석간에서 “패러사이트 싱글(パラサイト シングル, parasite single)”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성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문화를 문제 삼았다(Yamada 2001). 그는 1990년대 당시 20대와 50대의 부모 자식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패러사이트 싱글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山田昌弘 2020, 50). 야마다는 1995년에 행한 조사를 통해, 이 조사에 응한 20대 미혼자의 많은 이들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급료를 자신들의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용인하는 부모 또한 발견하였다고 한다. 즉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일본 사회의 미혼화 그리고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미혼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는 이유는 “여자는 남자가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기를 원하며, 남자는 여자가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결코 서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당한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단지 기다리며, 그 동안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이다(야마다 마사히로 2021, 66).

이와 같은 패러사이트 싱글의 출현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은 서구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야마다의 주장이다.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역시 1980년 무렵부터 합계출산율이 2.0을 밑도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2차 인구학적 전환론’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으로 분석한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결혼 연령 상승과 결혼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1960년대 나타난 일련의 성(性) 관련 혁명 (contraceptive, sexual, gender revolutions)으로 전통적인 가족 중심 가치관에서 개인의 자율성, 자아실현

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동거, 이혼, 그리고 1인 가구 등 비전통적 가족 형태가 증가하며, 이는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동반한다는 것이다(Lesthaeghe 1983). 따라서 합계출산율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일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고용 제도 개선과 가내 부부간의 분업 의식을 고취하여 ‘미완성의 성 혁명(unfinished gender revolution)’을 완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야마다는 이와 같은 제2차 인구학적 전환론에 기반한 방안은 일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서구 후기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 변화에 기인한 결혼율 그리고 출산율 감소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여성이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례로 야마다는 2004년 일본과 스웨덴의 기혼여성의 “가계 유지에 대한 책임 의식” 비교 조사를 들면서, 일본 정규직 여성의 85%가 “결혼 후 가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인식을 가진 정규직 여성은 14%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야마다 마사히로 2021, 69-70). 즉 일본의 경우 근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업에 기반한 가족 중심 가치관이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는 속에서 비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야마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적 상황 속에서 야마다가 1995년에 발견한 패러사이트 싱글은 주로 여성이다. 특히 “대졸이 아니거나, 지방 거주이거나, 중소기업 근무이거나, 비정규직인 여성”인데, 왜냐하면, “일본 사회 전체의 출산율이라는 거시적 수치를 움직이는 것은 ‘대졸, 대도시 거주자, 대기업 정사원 또는 공무원’인 커리어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마다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2001년에 18세이었던 사람의 4년제 대학진학률(지금 37세 전후의 사람)은 39.9%(남성 46.9%, 여성 32.7%)였다. 즉 2000년대에 출산, 육아기에 있었던 여성의 약 2/3는 4년제 대졸이 아니고, 대개는 전문대졸이거나 고졸이었다... 또한 4년제 대졸이라고 모두 정사원이고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할 수 없다. 대졸 여성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정사원으로 취직해도 몇 년 만에 이직하여 파견 등으로 근로방식을 바꾸는 예가 많다”(야마다 마사히로 2021, 36).

이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사회는 생계를 담당하는 ‘샐러리맨 남편’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로 성별 역할이 이분된 핵가족이 1960년대에 출현하여 ‘따라잡기’ 고도성장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주체가 된 것과 연동되어 있다.¹⁾ 샐러리맨과 전업주부는 고도 성장기 일

1) 우에다 치즈코에 의하면, 전후 일본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별 역할 분담된 ‘핵가족’은 전근대적 가부장적 ‘이에’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변종이며, ‘아버지의 지배’에서 ‘남편의 지배’의 형태로 “근대가족 고유

본에서 “소박한 일본인의 꿈(ジャパニーズ.ドリーム)을 꿈 가장 전후적인 일본인”이었고, ‘소박한 꿈’은 “종신고용이고, 연공임금이고, 부부와 두 자녀의 ‘표준가정’이며, 도시 근교 주택단지의 자기 집에서 사는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境屋太一 2001, 13). ‘소박한 일본인의 꿈’을 꾸는 여성에게는 경력을 쌓아 직업을 갖는 것보다 결혼하여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사회적 표준이었다. 1960년대 고도성장 속에서 일본 사회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기업사회는 ‘샐러리맨’ 중심의 고용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처럼 성별 역할 분담에 기반한 고용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기업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종신고용’과 ‘연공임금’ 보장을 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는 정규직 ‘샐러리맨’과 결혼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²⁾

그런데 1973년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경제구조 조정 및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업종 부문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임시업무에서 (비숙련)노동력 부족 현상이 동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업종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고도 성장기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기혼·중장년 여성 내의 잠재적 실업 군에서 나왔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시점에서 “최근 20년 동안 여성 라이프코스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것은 고도 성장기 초반에도 볼 수 없었던 중단-재취업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우에노 치즈코 2009, 66).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가계의 부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 패러사이트 싱글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1980년대 중반에는 이미 ‘전업주부’는 표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본 노동자 세대의 맞벌이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야마다가 발견한 패러사이트 싱글은 “최근 20년 사이에 거의 드러나지 않던 존재에서 최대 다수파로 부상한” 중단-재취업형 여성의 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패러사이트 싱글은 중단-재취업형 여성 노동력에 의존해서 유지된 개발주의 고도 성장형 기업사회 구조에서 이탈한 미혼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야마다에 의하면, 이들 패러사이트 싱글은 “가정과 양립하면서까지 계속할 만한 일” 또는 “사는 보람”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

의 억압성” 전전, 전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우에노 치즈코 2009, 99).

2) 샐러리맨의 경우에는 기업에 귀속되는 삶을 통해 입신출세를 추구하면서, 기업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에토스를 공유하는데, 이를 ‘샐러리맨 보수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샐러리맨 보수주의는 “①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인 능력주의와 사회주의의 핵심 개념인 공동체주의의 절묘한 균형 속에서 나타나는 ‘회사주의’ 또는 ‘기업주의’를 모태로 하면서 형성되고, ② 대내적으로는 분업화된 성(性)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③ 대외적으로는 아시아를 타자화하면서 현대 일본 사회에서 지배적인 규범으로 작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정선, 2009. 『만화『시마과장』과 현대 일본의 샐러리맨 보수주의』, 『아세아연구』52(3): 231-232 참조.

는 “일본에서는 기혼여성이 일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당연한 상황이 아니며, 일을 통해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여성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야마다 마사히로 2021, 78).

즉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의식 형성 속에서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일본의 ‘취업형’ 또는 ‘중단-재취업형’ 여성에게는 약하다는 것이다. 대신에 성별 분업형 노동시장과 고용 제도를 수용하는 속에서 “풍족한 소비생활”을 추구하고자 부모와 동거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거품경제 속에서 미혼 여성은 높은 수준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과 현실적으로 제한된 수입 능력에서 오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우 상대방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고착된 성별 분업적 노동시장에서 ‘중단-재취업형’을 기피하며, 대신에 “풍족한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이 결혼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부모는 자식의 “풍족한 생활 방식을 영유하기 위한 무임승차”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패러사이트 싱글의 발견은 이처럼 딸들의 무임승차를 용인하는 부모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일본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경제적 자립 또는 자아실현보다는 딸들의 안정적인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애정 또는 “리스크 회피” 문화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성평등 의식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 가족 문화 속에서 ‘자식이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성인 미혼 자녀와 부모는 동거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혈연 가족 문화 중심의 해석은 패러사이트 싱글의 어머니 세대 여성이 겪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에노 치즈코는 1980년대 후반에 40대, 50대에 속한 여성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여성은,

고도 성장기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출산연령에 접어들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만 해도 나중에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만큼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중단-재취업형의 라이프코스는 낯설었던 유형이다. 그후 20년 사이에 경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여성들은 직장복귀에 대한 준비도 없었거니와 중장년기에 접어든 자신들을 기다리는 노동시장이 어떤 곳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다.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 여성들은 일찍이 그 예가 없는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우에노 치즈코 2009, 71-72)

다시 말하면, 패러사이트 싱글의 어머니 세대는 전업주부의 삶을 통해 ‘소박한 일본인의 꿈’을 살고자 했던 이들이었는데, 1970년대 구조조정 속에서 ‘샐러리맨’ 중심의 기업사회에서 서비스업 종에 비정규직-재취업형, 저임금 노동력으로 편입되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이민노동자를 받지 않았던 일본 사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기혼여성의 재취업형 노동력은 다른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이민 노동자가 담당한 부문에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사와 주변화된 임금노동의 이중역할을 부담하는 “일찍이 그 예가 없는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 1970년대는 비정규직-재취업형 출현은 사회적으로 ‘육아휴업법’(1975)이 통과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이 법은 기업에게 육아 휴직을 실행하도록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³⁾ 이들 여성이 그녀의 딸들이 하는 ‘무임승차’를 용인하는 ‘진짜 원인’은 성별 분업적, 차별적 고용 구조 속에서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동원되면서, 전례가 없는 이중부담의 라이프코스를 경험하면서 가지게 된 역사적 좌절감은 아닐까?

이와 같은 역사적 좌절감은 이미 언급한 통계에서 추정할 수 있다. 야마다는 『출생동향기본조사』에서 “결혼 지속 기간 15-19년 부부가 낳은 평균 자녀 수”가 200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2.0 이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나갔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아마도 이 합계출산율이 2010년부터 2.0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점일 것이다. 참고로, 기혼여성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서구의 후기 산업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결혼한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자가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남자의 수입, 남녀 수입의 차이, 노동 시간, 부부간의 분업 의식 등과 같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함께 취업률이 높아진 많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남성의 가내 분업 의식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성별 고용 구조로 ‘샐러리맨’ 남편의 가내 분업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Brinton 2021, 183). 역사적 좌절감을 공유하는 취업 또는 중단-재취업 여성이 둘째를 갖지 않는 것이 합계출산율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거품경제 붕괴(1992년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패러사이트 싱글도 분화되었다. 1980년대의 패러사이트 싱글이 중년으로 고령화되는 한편, 새로운 패러사이트 싱글이 출현하는데 이는 남성 중심의 정규직 고용 제도의 균열과 맞물려 있다.

3) 1971년부터 1974는 사이에 육아 휴직을 허용한 기업은 2.3%에서 5.7%로 약 3% 상승하는 데 그쳤고, 1976년과 1978년에는 각각 6.3%와 6.6% 기록하였다. Priscilla A. Lambert 2007,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war Family Policy in Japan: Economic Imperatives and Electoral Incentive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33(1), 20 참조.

이 시기 일본은 경제성장이 거의 멈추게 되면서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고, 남성 정규직 중심의 고용 제도의 분화가 발생하였다. 즉 고졸과 대졸 남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억제되면서 청년 세대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젊은이, 특히 패러사이트 남성 싱글이 출현하고, 젊은 여성은 더욱 결혼을 미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젊은 남성의 노동시장 전망 악화가 일본 사회의 비혼화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Brinton 2021, 177).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 고용에서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는 ‘격차사회’의 출현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 변화에 따라 야마다의 분석에도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 1990년대에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인이 젊은 여성의 ‘풍족한 소비생활’에 대한 욕망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에는 일본 특유의 ‘체면 의식’으로 확장되었다. 야마다는 “생활 수준에 대한 체면 의식”이 저출산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야마다 마사히로 2021, 127). 특히 성인 미혼 자식과 부모가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공유되는 저변에는 ‘남들만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체면 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면 의식이 격차사회가 출현하면서 ‘남들만큼의 생활’로부터 전략할 위험을 피하려는 의식, 즉 “중류 전략 불안” 심리로 표출되고 있으며, 바로 이 불안 심리가 일본인이 “결혼만이 아니라 남녀교제까지 삼가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희망 수 이상으로 낳아 키우는 것”을 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야마다 마사히로 2021, 141).

요약하면, 야마다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일본에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일본적 특징은 남들만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체면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체면 의식 때문에 성인 미혼 자녀는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부모는 이를 용인하며, 결국 부모와 성인 미혼 자녀가 동거하는 문화가 만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일본적 특징은 간과한 채, 일본의 저출산 현상이 서구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가족형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커리어 여성 중심’의 ‘여성 활약’이 가능한 양성평등 고용 제도 수립과 노동 환경 개선에 한정된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잘못된 전제 위에서 나온 정부 대책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야마다의 진단이다. 따라서 “‘대졸이 아니고, 지방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여기에 자영업 후계자나 가족 종업원을 더해도 좋다)’인 젊은이의 상황

이나 태도, 의식(39) 등을 중심으로, “커리어 여성이 아닌 여성의 일하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37)”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구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제2차 인구학적 전환론’들을 일본 사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야마다의 지적은 일부 타당하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의 요인은 서구의 선발 산업자본주의 국가를 단시간에 ‘따라잡기’ 위해 만들어진 개발주의 성별 분업적 고용 제도와 연동되어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혼 현상은 효율적인 노동력 생산과 재생산을 극대화하는 기업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면서 ‘샐러리맨’과 ‘전업주부’를 표준화한 일본형 가족의 전개라는 역사적 고유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형 가족은 분화하고 있다. 1970년대 경제구조 전환 그리고 1990년대 경제 저성장 속에서 ‘샐러리맨’과 ‘전업주부’ 그리고 두 자녀로 구성된 표준 가족형은 종언을 고하고 있다.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패러사이트 싱글이다. 고단한 ‘중단-재취업형 라이프코스’를 회피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새로운 핵가족 유형이 출현하였고, 이는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선택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성평등을 추구하는 ‘혁명적인’ 인식 전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패러사이트 싱글은 ‘전업주부’를 꿈꾸면서 결혼을 미루는 것이지, 성별 분업적 고용 제도에 조직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패러사이트 싱글의 ‘무임승차’를 용인하는 부모의 선택을 단순히 ‘체면 의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단-재취업이라는 전례 없는 라이프코스를 경험하면서 일과 가사라는 이중부담을 체험한 (패러사이트 싱글 1세대의) 어머니들의 집단 경험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일본형 성별 분업적 노동시장과 가족제도에 대한 역사적 좌절감이 딸들의 선택을 무언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경제 저성장기에 나타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하기 시작한 남성 노동시장이 패러사이트 싱글의 분화를 동반하면서 일본 사회의 비혼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사회에서 “결혼·출산을 회피하는 진짜 원인”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탱된 정규직 샐러리맨, 중단-재취업형 주부로 구성된 개발주의 성별 분업적 노동 구조 및 가족제도가 이제는 작동하기 힘들어지고, ‘소박한 꿈’의 실현이 떨어진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본 경제가 저성장세를 유지하게 되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정규직 샐러리맨 고용이 억제되고, 젊은 남성들도 비정규직으로 주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제는 ‘전후 일본인의 소박한 꿈’을 꾸지 않는다. 그리고 중단-

재취업이라는 형태로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여성들의 역사적 좌절감은 그녀의 딸들이 결혼을 미루는 데 무언으로 동조하면서 일본 사회의 비혼화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우에노 치즈코. 2009. 『근대가족의 성립과 종언』. 서울: 당대.

한정선. 2009. “「만화 『시마과장』 과 현대 일본의 샐러리맨 보수주의”, 『아세아연구』 52(3): 228-283.

境屋太一. 2005. 『新版 団塊の世代』. 東京: 文藝春秋社.

山田昌弘. 2020. “「パラサイト・シングル」 現像の自己分析”. 『家族研究年報』 45:53-59.

Brinton, Mary C. 2021. “Family and Demographic Issues in Japan,” *Routledge Handbook of Cotemporary Japan*. London: Routledge.

Lambert, Priscilla A. 2007.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war Family Policy in Japan: Economic Imperatives and Electoral Incentive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33(1): 1-28.

Lesthaeghe, Ron.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3):211-51.

Yamada, Masahiro. 2001. “Parasite Singles Feed on Family System,” *Japan Quarterly* January-March: 10-16.

초연결사회의 인구감소: 브리콜라주 몸을 중심으로^{*)}

유광석(경희대)

I. 들어가는 말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란 협의로는 사물인터넷(IoT) 및 만물인터넷(IoE), 광의로는 4차 산업기술문명 전반을 토대로 한 인간, 사물 및 주변환경 간의 관계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를 의미한다(김영준·이상흠·정광현·정일영 2014, p.28). 구체적으로는 3차산업시대의 인간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연결성에서는 단절되고 객체화되었던 다양한 사물들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체계에 상호연결됨으로써 무생물, 생물 및 사물들이 하나의 정보체로서 그 관계가 대등하고 쌍방향적인 네트워크망으로 조직된 사회를 말한다(오은열·신준옥 2023, p.46; 이재현 2020, p.19).

여기서 초연결성은 인간들 간의 관계를 ‘초월하여’ 형성되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회관계망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박지웅 2018, pp.273-4).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는 몸에 대한 전통적 통제와 전형화된 개념들이 해체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 및 소유되는 몸의 소비·유통·재생산이 국가와 자본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이 강화된다. 한편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었던 몸이 사유화됨으로써 “몸의 세속화(secularization of the body)” 과정이 일상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들 그 자체의 가치와 권위가 극대화하고 심지어 숭배되는 “몸의 신성화(sacralization of the body)”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찍이 종교사학자 엘리아데가 『성과 속』(1957)에서 인간성의 본질로서 성속(聖俗)의 양가성을

^{*)} 이 글은 『연결하는 인간: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지평』 (2025, 문사철)에 기고된 저자의 기고문을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E-mail: ksyooii@khu.ac.kr

통찰한 것처럼, “몸의 양가성(Mellor and Schilling 1997)”은 국가의 인적·물적토대로서 국가와 자본에 의해 관리된 “인구 및 노동”의 급격한 해체 현상 가령, 저출산, 비혼, 지역소멸, 1인 가구, 고령화 등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는 비인간동물, 인간동물, 생성형 AI, 로봇, 가상(또는 증강)현실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비정형적인 “브리콜라주(bricolage)의 몸”을 재생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결국, 사물인터넷 기반 초연결사회의 도래는 “인구”나 “노동”으로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몸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몸의 개념과 질서”를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심지원 2017, p.175).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인간중심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정치경제적 인구개념의 한계를 소개하고, 초연결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서 몸의 양가적 인식패러다임(Coakley 1997)으로서 일상에서 표상되는 비정형적이면서 편재적인 “브리콜라주 몸”을 설명한다. 나아가 초연결사회의 비인간중심주의(non-anthropocentrism)와 호환가능한 “새로운 몸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동서양의 철학적·신학적·사회학적 이론들을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비교 고찰한다.

끝으로, 4차산업 기술문명과 “브리콜라주의 몸” 간의 관계성이 몸의 재생산구조에 미친 영향들에 기초하여 초연결사회에서 증가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비혼·비출산, 1인가구, 동성혼가족, 비혼가족, 반려동물 등)을 중심으로 그것의 사회정책적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II. 전통적 ‘몸’ 개념과 그 한계

인간의 몸에 대한 전통적 통제와 이해를 기초로 근대산업사회의 합리화 과정과 탈주술화 과정을 통해 건설된 “몸(body)의 개념”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간과 사회를 관통하는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인식패러다임으로서 기능했다(김기봉 2019, pp.9-11; 김남옥 2012). 고대국가, 봉건제도, 민족국가(nation state)의 공통된 물적 기초로써 사용된 ‘육체적 몸’은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혼’, ‘마음’, ‘이상’과 같은 형이상학적 존재들의 반대개념으로서 관리 및 통제되어야 할 형이상학적인 실체로서 이해되면 충분했다.

몸에 대한 이러한 이원론은 데카르트로 상징되는 서양철학은 물론이고,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유물론을 거쳐 몸의 절제와 훈련을 인간의 기본윤리로 규정한 동양의 유교적 세계관 및 베버명제에서 강조된 개신교의 금욕적 직업윤리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견인한 불변의

개념이자 도구였다.

몸에 대한 이러한 이원론적 개념화는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1976), 브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의 『몸과 사회』(1996), 가톨릭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주창한 ‘몸의 신학’(West 2003)과 같이 주로 철학, 사회학, 신학적 이해의 기초를 형성하고 개인, 가족, 사회 및 국가가 인간동물(human animal) 및 비인간동물(non-human animal)의 몸을 통제, 관리 및 재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을 규명하는데 기여하였다.

1. 유교적 몸(Confucian Body)과 가부장제

유교적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과 그 재생산 과정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인간중심적 사회철학자이자 도덕 윤리로서 ‘비인간의 몸’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유권종 2019). 몸의 사적 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몸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가족의 소유 및 관리에 의존한다. 역사적으로 유교 국가시스템에서는 몸의 재생산 의무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낙태나 피임 등은 비윤리적 행위로 인식되었다(백옥경 2007, p.195).

게다가, 유교적 세계관에서 몸은 정신에 종속되고 본능적이며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수련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문화적 통제 및 관리방식이 강제되고 정당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 연구자들은 유교문화권에 팽배한 가부장주의가 위계화된 몸의 질서를 지탱해왔으며, 오늘날 동아시아 여성의 저출산율과 비혼율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만드는 주요한 문화적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김미향 2024; Cheng 2020).

이처럼 유교 체제에서 몸의 재생산 기능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접근법은 피상적이고 계량적인 경제학적 또는 인구학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보다 근원적 관점에서 몸의 철학적 및 사회학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남성중심적인 신분제 사회를 지탱한 유교의 가부장주의는 젠더를 초월한 재생산 담론이 원래부터 존재할 수 없었다는 종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몸의 위계화 및 서열화에 대한 젠더 편향적 연구들은 “유교적 몸(Confucian Body)의 질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유교의 일원적 사유전통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관계를 몸과 손으로 비유하여 설명한 기정진의 주리설(主理設)이나 중국의 이기합일설(理氣合一設)에서 분명히 드러나며(현상윤

2010, p.549), 우주의 원리로서 작동하는 이(理)와 기(氣)를 영과 육으로 양분하는 기독교의 이원론적 방식과 매우 다른 차원에서 몸을 해석한다. 유교의 종교성을 강조하는 금장태 교수의 경우 망자에 대한 초혼(招魂)의식에서 영과 육의 이원적 사고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금장태 1997, p.199), 영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교적 전통에서 ‘유교적 몸’은 영혼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심리적·물리적·정신적 몸’의 연결체로서 살아있는 후손과 죽은 조상의 대화를 통해 가문의 세대 전승을 체현하는 일원적 몸이다(Adler 2003, p.354).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적 몸의 질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을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차별하지 않으며, 조상과의 관계에서 또한 ‘동등한 몸’이다.

게다가, 가부장주의는 인류문명에 내재한 일반적 특성이지 유교만의 문제는 아니다(Endler 2021; Coakley 1997; Engels 1981, pp.76-77). 사실 동일한 유교문화권에서조차 몸의 통제방식은 민족적 전통, 지역, 인종, 정치체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상이하게 작동해왔으며, 기독교적 맥락과는 다른 유교적 몸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의 비교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함인희 2013).

유교적 몸의 통제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유교사회의 업적주의나 극한적 경쟁주의 역시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공통된 노동자의 몸을 착취하고 소비하는 자본의 운영원칙인 것은 맞지만(김주희 2013; 김남옥 2012, p.306-307), 유교사회에만 있는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초연결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에 의해 강제된 몸의 개념과 역할에 저항하는 방식이 새로운 기술문명에 힘입어 증가하면서 몸에 대한 사적 통제의 다양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초연결사회의 저출산 및 비혼현상은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김남옥 2012, p.297; Schilling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 불교, 도교 및 민간신앙적 전통에서 전제된 인간중심주의적 몸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초연결사회에서 유교적 몸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확장적 담론에서 더욱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안환기 2019; 유권중 2018).

2. 기독교적 몸 (Christian Body)과 ‘몸의 신학’

기독교적 맥락에서 몸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의 창조 신화부터 오늘날의 생태신학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원죄론, 구원론 및 유일신 개념 전체를 관통하면서 강력한 사상적 전통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김정형 2020). 특히, 1980년대 초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교리 모음으로 정리된 “몸의 신학(theology of the body)”은 인간의 몸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신비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성스러운 매개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성성(sexuality), 결혼과 가족제도, 사랑의 실천 방식, 진정한 행복 등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압축한 개념화를 시도했다(손호빈 2016, pp.160-161; West 2003).

그의 “몸의 신학”은 데카르트적 서양철학에서 정립된 영육이원론이 몸의 도구성과 객체성에 매몰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기독교적 몸”의 의미는 신의 사랑을 의미 그대로 구현하고 표상하는 “인격이자 주체”라고 주장했다. (손호빈 2016, p.164). 이처럼 몸의 주체성에 대한 강조는 개신교의 과정신학에 기반한 생태신학의 발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과정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화이트헤드(A.N. Whitehead)는 『*Religion in the Making*』에서 “모든 존재는 본성상 사회적이며, 존재하기 위해 사회를 필요로 한다. ‘존재하기 위해 자기 자신 이외의 그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란 없다. 신조차도 그렇다”고 말한다(p.108). 푸코의 생명권력론을 재해석한 아감벤(G. Agamben)의 생명정치 신학에서는 ‘생명’ 개념을 우주의 생태계 전체로 확장하는 정치 신학적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김석 2024, pp.160-162). 이들은 전통 신학이 의존한 극단적 종차별주의(specisism)적 폐쇄성과 자기 파괴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관계적 의미에서 신의 본성이 내재해있음을 전제한다. 이처럼 현대 생태신학에서 몸의 연결성과 전체성(holism)을 강조하는 인식의 전환은 더욱 더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회학적 차원에서 “몸의 사회학”을 정립한 브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에 따르면, 기독교 가부장제에서 몸의 사회적 지위는 ‘순수한 어머니, 아니면 창녀’로 양극화되었으며, 재생산 활동에서의 분화가 젠더를 초월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Turner 1996, pp.258-9). 하지만, 임인숙이 쉐링(C. Schilling)과 터너(B. S. Turner)의 저서들을 번역하면서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본격화된 사회학적 관점의 몸의 연구는 여전히 푸코의 권력담론(푸코 2011; 2014)이나 자본주의 구조론 및 페미니즘의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남옥 2012, pp.303-311). 그들은 공통적으로 터너의 젠더 편향성을 비판하면서도 후기산업사회에서 몸의 상품화, 권력화, 위계화와 같은 제 현상을 ‘몸의 세속화(secularization)’로 단순화했던 터너의 관점 역시 철저한 비판 없이 따르고 있다(Turner 1996, pp.387-8).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정과 경제의 분리를 낳았다는 베버와 페미니즘의 입장에 대해, 터너

는 『몸과 사회(*The Body and Society*)』에서 “가부장제를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자 그것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소비 단위로서 가정의 유지를 지지하는 것이 자본가에 이익이 된다. 둘째, 여성의 재생산 기능은 가족가부장제에 의해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이 자본 대비 노동비용을 절감시킨다(Turner 1996, p.290). 이러한 주장의 역사적 타당성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터너는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 역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가족적 가부장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초연결사회로 이행하면서 자본주의의 기초가 된 가족적 가부장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유형의 가족관계(무자녀가구, 1인가구, 미혼모 가구, 동성부부 등)가 일상화되는 것은 종교/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가부장적 몸의 해체로 이해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몸의 재생산 문제는 구성원 각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가령, 결혼, 출산, 낙태, 이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가치체계, 즉 몸의 탄생과 소멸을 규정하는 생사관(生死觀),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몸의 관리와 소유를 규정하는 도덕적 정체성과 일탈, 몸의 해석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그 시대의 문화적 사고와 기술문명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다(Cheng 2020; Geraci 2008, p.140; Jordan 2006).

고대 세계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일곱 번의 기도를 규율화한 중세수도원에서 기계식 시계가 탄생한 것처럼(Mumford 1962, pp.38-40), 몸의 재생산도 각 시대와 사회에 특수한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이슬람이나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가나 몰몬교의 다산주의, 종교별 및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출생률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미 서구에서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다(Baudin 2015; Westoff & Marshall 2010; Dharmalingam & Morgan 2004; Johnson 2004; Marcum 1986; Westoff & Jones 1979; Mayer & Marx 1957).

이러한 연구는 세속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프랑스에서조차 교육이나 소득 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가족, 배우자, 부모의 종교적 배경에 따른 유의미한 출산율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종교적 몸(Religious body)’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Baudin 2015; West 2007). 게다가,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일찍이 『과학혁명의 구조』(1962)에서 규명한 것처럼, ‘몸’의 과학적 지식 또한 ‘종교’ 개념처럼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형태로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되고 건설된다(Davie 2005; 1990; Luckmann 1967; Berger and Luckmann 1966). 따라서 가시적이고 계량화된 인구변화에만 집착하는 몸의 이해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한 전

통적 인식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에 기반한 인간동물 상호 간 및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동물과 사물 및 사물과 사물 간의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한 초연결사회에서는 기존의 이원론으로는 개념화될 수 없는 비정형적이고 다양한 관계성에 기반한 ‘새로운 몸들’이 일상에서 구현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 및 생체데이터를 스스로 수집·분석·가공·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밀접한 사회적 관계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초연결사회에서 ‘몸들’의 정의, 관계, 구조적 질서, 법적·제도적 규정들에 대한 새로운 문명적 사고와 철학들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김문조 2023; 2020, p.70; 이재현 2020). 가령, 들뢰즈의 사고에 따르면, 연결사회가 국가라는 거대 연쇄 장치(linkage apparatus)를 통해 연결된 사회로서 단일한 권력 중심이 위계 구조를 갖는 “수목형(arborescent model) 네트워크”로 몸을 연결하는 반면에, 초연결사회는 국가 주도의 연결성을 배제하고 평등과 개성적 자유를 추구하여 정보·지식·기술·능력에 의존한 불평등 관계를 넘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기기 간 연결을 통해 “수평적 리좀형(rhizome model) 네트워크”로 몸을 연결한다(김태수·김덕삼 2024, p.215; 박지웅 2019, pp.26-27).

III. ‘인구’의 해체와 “브리콜라주의 몸”

인간들 간의 기계적 연결성의 한계를 극복한 초연결사회의 국가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특히 일상적 삶에서 브리콜라주 몸의 편재성(遍在性)과 비정형성(非定型性)이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질적변화는 역사문화적 전통이 상이한 동서양 국가들에서 다양하게 표상될 것이다. 특히, 초연결사회의 비인간중심주의적 연결망(non-anthropocentric network)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양방향적인 관계성의 이면에서 역설적으로 소외당하는 몸과 그로 인한 몸의 일탈과 저항 가령, 정체성 혼란과 정신 분열, 비혼 및 비출산, 비전통적 가족 형태, 자발적 은둔, 맹목적 기술숭배, 개인정보의 임의 조작 등 이 공통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1980년대 이후 유교 자본주의 명제를 낳았던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경제적 성장은 전후 빈곤의 시기에 ‘인구’와 ‘노동’으로서 통제된 몸을 정치-경제적 자원으로 편

리하게 동원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몸’은 값싼 양질의 노동력으로 소모되고 착취당하면서 ‘몸의 노동화’를 강화했고, ‘유교적 몸’의 개념은 기독교적 몸의 이해만큼이나 국가와 자본이 추구하는 이익에 충실한 몸의 통제를 정당화하였다(성정현·김희주 2016; 김혜영 2007; 백옥경 2007).

또한 이러한 전통적 몸의 통제는 근대자본주의와 국가주의를 연결하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국가와 자본의 지속적 성장과 존립을 위한 기초적 필수자원으로 몸을 착취하였다. 특히, 소비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몸의 상업화와 물신화, 즉 몸의 소비와 탐닉이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과학적으로 합리화되고, 시민정치 영역에서 ‘시민의 몸’은 기성권력을 재배분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시민권력의 자원으로서 개념화되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가의 개입을 전제한 인구학·고용·복지·지역균형 혹은 경제학적 접근법에 치중하였다 (황이인도 외 2024; 이철희·황영지 2022; 장문현 2022; 2023; 배은경 2021; 주상현 2021; 하종원·김태완 2021; 하정옥 2015; 조명덕 2010; 이인숙 2005).

하지만, 인구와 노동의 필연적 감소를 야기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자본에 예속된 노동으로서 그리고 납세·국방 및 권력자원으로서 편리하게 통제 가능한 ‘정치-경제적 몸’(조은주 2018; 조일준 2016; 함인희 2013; 다카시 1999)의 재생산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왜냐하면, 몸의 재생산을 위해 가부장제에 기반한 결혼 및 가족제도로 연결된 전통적 가부장제의 몸 개념에 저항하는 ‘새로운 몸들’의 과잉과 그 속성 때문이다. 4차산업 기술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초연결사회에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비정형적 몸들, 즉 ‘브리콜라주의 몸’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레비 스트로스가 『야생의 사고』에서 소개한 것처럼, 브리콜라주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고 언제든지 조작가능한 기술로서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과학’으로서 국가와 자본의 강제적 지배와 통제 이전에 존재한 ‘인류문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Lévi-Strauss 1962, p.69).

국가와 자본의 이익에 종속된 정형화된 ‘인구’와 ‘노동’은 초연결사회에서 탄생한 ‘브리콜라주의 몸’이 추구하는 자율성 및 임의성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정치-경제적 의미에서 ‘브리콜라주의 몸’은 본질적으로 저항적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 개발을 주도하는 전 세계 빅테크기업들조차 그것의 추론알고리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연결된 작업 및 전투로봇, 인공지능형 드론과 자율주행시스템, 빅데이터와 AI기반 상담·진단·치료플랫폼,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의 아바타, 딥페이크, 홀로그램, 인공지능 생활가전, 센서칩이 이식된 반려동식물 등은 제한된 용도의 군사기술 단계를 벗어나 수많은 일상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인

공지능 플랫폼들을 상용화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일상적 삶에서 과잉생산되는 이러한 새로운 몸들은 소수의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된 ‘인구’ 및 ‘노동’ 개념에 저항하는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창조하고 있다(이정전 2019, p.12).

얼굴, 팔다리, 뇌, 감각이나 지각조차 없지만, 브리콜라주로 표상되는 새로운 몸들은 일상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브리콜라주의 몸’과 기존의 ‘인구’는 초연결사회에서 공존이 불가능한 패러다임적 전환의 임계점에서 대립한다. 가령, 비혼·비출산에 죄책감을 느끼고 가족과 집단으로부터 도덕적 제재를 받던 전통적 몸들은 이제 가상현실의 공동체나 아바타, 반려로봇, 반려동식물, 자율주행시스템 등과 일상에서 교감하고 관계하면서 그들에게 가족의 정체성 및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성의 몸들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 몸과 새로운 몸들이 창조·피조물 또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에서처럼 새로운 기술문명을 기반으로 그들의 관계가 대등하고 양방향적인 데이터를 저장·가공·유통·재생산하면서 평등하고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이재현 2020, p.59), 즉 일상의 초연결성을 창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연결사회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인구’로 대표되는 전통적 몸은 새로운 몸으로 재탄생하고 일상에서 새로운 몸들의 과잉 공급은 비정형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브리콜라주의 속성을 갖는다. 들뢰즈(Gilles Deleuze)의 대상류(objectile) 개념처럼 산업적 생산양식 속에서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은 새로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환된다(이재현 2020, p.40).

여기서 일상적 몸의 주체성 명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새로운 기술문명이 반드시 새로운 인식론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몸의 이해들이 주로 연결사회의 맥락에서 통제 가능한 육체로서 몸의 객체성을 분석했다면, 초연결사회의 맥락에서 몸의 주체성은 새로운 인식 패러다임에 기반한 문명의 전환과정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김문조 2023, p.62).

초연결사회의 빅데이터 공유네트워크망에 포함된 몸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육체(biological body) 및 그 구성요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질적 및 화학적 신진대사나 세포분열에 기초한 자기 증식의 과정을 전제하지 않는다. 가령,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반한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는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목표지점까지의 최단·최적 거리를 탐색하고, 다른 네트워크 공유체들과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고, 현재 경로의 다양한 위험을 감지하여 미

래의 최단·최적 경로를 알고리즘으로 연산하고 추론한다. 더 이상 생물학적 생명체의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몸은 거대한 빅데이터 공유망으로 연결되고 조직된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공 받는 주체로서 초연결 사회관계망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하나의 주체, 즉 “살아있는 몸”이 된다. 이러한 초연결성 시스템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육체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며, 그럼으로써 인간은 초연결 네트워크망에서 다른 몸들의 존재가치를 결정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지위나 역할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몸의 지위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몸인지 아닌지가 개념화되었던 반면에, 초연결사회의 몸은 이성·고통·지각 능력과 같은 개체중심적 생명체의 기준을 벗어나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빅데이터 공유망에 참가하는 모든 개체들은 초연결성의 맥락에서만 몸의 지위를 부여받고 ‘살아있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몸은 하나의 ‘살아있는 주체’이지만 생물학적 생명 그 자체는 아니다. 다만, 사물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서 실체를 전제한 관계성으로 그 주체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성과는 별개로 객체들의 실체를 전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초연결사회의 철학적 기반으로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할 것이다(이재현 2020).

더 나아가 이러한 주체성 논쟁은 생태주의에서 전제하는 관계성의 철학 및 비인간중심주의적 몸의 확장 및 평등 개념과 유사하지만, 초연결사회의 몸은 본질적으로 생태 이데올로기에 통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반생태적이거나 초생태적인 몸들로 언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적 몸으로 단순화하기도 어렵다. 양자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는 더 깊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의 존재가치를 관계성 또는 초연결성으로 귀속시키는 초연결사회나 생태주의 양자에서 ‘인구’나 ‘육체(인간의 몸)’와 같은 인간중심주의적 고정관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김문조 2023, p.83; 유권중 2019, p.166; 심지원 2017).

IV. 초연결사회에서 몸의 소외

초연결성 네트워크에 속한 몸들은 사실 연결사회에서 문제시되었던 국가와 자본에 의해 소유 및 통제된 생산수단으로부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는 맑시즘적 인간소외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야기된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주장된 단순한 ‘정보의 격차’(김문조 2020,

p.63-4)로 환원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초연결성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몸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화되어 초연결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고 분열하는 주체들임과 동시에 수집·처리·가공·공급되는 객체들로 기능하기 때문이다(이지용 2021, p.88-90).

이러한 몸의 소외는 단순히 기술문명으로부터의 고립이나 분리가 아니라 초연결사회의 존립 방식이고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불가역적인 것이다. 맑시즘적 문명론에서는 무산 계급에 대한 유산계급의 착취와 소외가 문명적 발전의 기초인 반면에(Engels 1981, p.239), 초연결사회에서는 몸의 소외가 활발하면 할수록 사회의 초연결성이 강화되는 역설적 모순이 존재한다. 인간이든 사물이든 데이터화되지 않고는 초연결사회에서 살아있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연결성에 기반한 알고리즘은 인간동물, 비인간동물 같은 종(種)의 생존이익이나 사물과 같은 무생물적 개체의 이익에 종속되지 않는다.

종(種)들 간 기계적 연결에 기반한 연결사회에서 소외현상이 거식증이나 폭식증 그리고 자살처럼 인간의 몸을 스스로 학대하거나 파괴하는 행태, 동물 학대처럼 다른 종(種)을 파괴하는 행태, 기후 및 자연환경이나 사물에 대한 개발착취처럼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행태들과 같이 그 종들 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태를 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초연결사회에서 몸의 소외는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 친화적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연결사회에서는 기술문명을 개발함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면, 초연결사회에서 기술문명은 브리콜라주의 몸을 전체론적(holistic)으로 연결된 빅데이터로 환원시키면서 주체적 몸의 원래 의지와는 무관한 인공지능 플랫폼의 알고리즘, 즉 하나의 패턴에 종속됨으로써 몸을 소외시킨다. 영혼이나 정신의 반대개념으로서 ‘육체’는 고립되고 구분 가능한 독립된 몸이었지만, 초연결성 네트워크에 포함된 ‘육체’는 뇌파, 호르몬 분비, 생체리듬, 체질량지수, 식습관, 인지 패턴, 소비패턴, 성장 및 죽음 패턴 등 다양하고 거대한 빅데이터로 처리되어 기존의 단순연산 기능으로는 추론이 불가능한 초연결성 플랫폼에서 창조된 하나의 패턴으로서 그 정체성을 형성한다(Geraci 2008, pp.153-154).

전통적 몸의 존재 양식에서 몸의 소외는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배제된 것으로서 정신 분열 및 고립, 거식증·폭식증 및 자살 등의 육체적 자기학대, 종차별주의(specisism)와 생태계 파괴 등 타자 학대, 몸의 극단적 사유화와 상품화, 비혼 및 비출산 등의 사회적 일탈 및 저항을 야기하지만, 그와 반대로 초연결 네트워크망에서 몸의 소외는 사회의 초연결성에 기여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몸의 사회적 정체성을 오히려 강화한다. 초연결사회에서 몸은 단순히 신성한 힘을 상징하거나 성

적 페티쉬즘(fetishism)의 대상이 아니라, 비인간중심적 초연결 관계망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기능하는 전체론적 시스템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초연결성으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주체이자 객체로서 몸이 초연결성에 자발적으로 종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되는 상태가 된다. 자기학습적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리소스(resource)로서 초연결사회의 몸은 자기학대나 타자 학대의 의도가 없음에도 그 관계망으로부터 삭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어 데이터화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에서 종차별주의(speciesism)는 관찰될 수도 없지만 관찰된다 하더라도 금새 무의미한 것이 된다. 초연결성 알고리즘은 인간이나 비인간을 표상하는 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류 없는 초연결성의 유지 및 강화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초연결성의 구성에 포함되면 될수록 인간이나 비인간 존재의 몸은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소외된다.

V. 맺는 말

4차산업 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기술문명에 기반한 초연결사회에서 몸의 개념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인구’와 ‘노동’의 지배와 착취를 통해 성장한 국가주의와 산업자본주의를 정당화한 전통적 몸의 이해가 이제 문명사적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규명하게 한다. 무엇보다 ‘몸’에 대한 지배와 통제 및 활용양식의 탐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통적 인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정책적 성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연결사회의 맥락에서 제시된 철학적·신학적·사회학적 몸의 이해에 내재된 시대적 및 의미론적 한계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연결사회의 맥락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술문명의 초연결성 차원에서 기존 몸의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문명사적 성찰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초연결사회의 특성을 비교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각 문화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초연결성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표상들을 국가별 및 사례별로 수집 및 정리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질적변화에 대한 심층적이고 공시적인 이해에 기여한다. 특히, 동서양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초연결사회의 비교문화적 이해는 4차산업 기술문명에 의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기술이 일상적 몸에 체화되면서 수반되는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질서 및 세계관의 변화를 추적·관찰·비교함으로써 인간·동식물·무생물 및 AI로봇과 가상현실의 아바타까지 ‘몸의 표상’을 가진 사물 전체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발전에 기여한다(이재현 2020).

정책적 관점에서는 먼저 4차산업 기술문명의 정치-경제적 파급효과에 집중된 기존 정책 방향의 한계에 집중한다. 특히, 정신-문화적 요소를 기술문명의 피동적 주체로 전제하는 기존 인식 패러다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초연결사회의 맥락에서는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한지를 설명한다. 둘째, ‘인구정치’ 및 ‘인구경제’에 기초한 한국사회의 성장패턴이 ‘초연결사회의 몸’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초연결성 기반 ‘몸의 거버넌스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4차 산업기술에 의해 일상에서 양산되는 비정형적 몸들의 과잉, 즉 ‘브리콜라주의 몸’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고 그에 수반되는 법적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기초적 조사자료를 제공한다. 끝으로, 최근 양극적 사회갈등과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반려문화 담론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 반려동식물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반려아바타·반려사물체 등의 생명성 여부, 그에 관련한 인본주의이념, 가구형태 및 가족정책, 사회복지 및 시민문화정책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초연결사회에서 제기될 새로운 공적 담론을 심화·확대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훈. 2021. “머느리 따라오는 무서운 조상신: 제주 도채비 신앙과 혼인기피 관습에서 드러나는 유교이념과 실용논리의 충돌” 『한국문화인류학』 54(3):3-42.
- 김기봉. 2019. “저출산에 대한 문명사적 조망”. 『시민인문학』 36:9-41.
- 김남옥. 2012. “몸의 사회학적 연구 현황과 새로운 과제”. 『사회와 이론』 21(1):289-326.
- 김문조. 2020. “AI시대의 디지털 격차”. 『지역사회학』 21(1):59-88.
- , 2023. “지능정보화와 새로운 문명시대의 도래”. 『사회사상과 문화』 26(2): 55-91.
- 김미향. 2024. “인구절벽 유독 심한 동아시아 국가들, 왜 그럴까.” 한겨레 2023.2.21.
- 김 석. 2024. “아감벤의 ‘생명정치론’의 현대 생태신학적 함의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9:149-184.
- 김영준·이상흠·정광현·정일영. 2014. “초연결사회 인프라 구축에서의 지식화 메커니즘”. 『정보와 통신』 4월호:28-36.
- 김정형. 2020. “몸의 현상학과 몸의 사회학을 통한 몸의 부활 교리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 탐구”. 『신학사상』 189:229-254.
- 김주희. 2013. “1970년대 한국 경공업 여성노동자의 신체성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43(4):1-20.
- 김태수·김덕삼 2024. “초연결사회의 지성사적 조망:근대시민사회와 초연결사회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17:211-237.
- 김혜영. 2007. “1인 가구의 비혼사유와 가족의식”. 『한국사회학대회자료집』, pp.1041-1057.
- 금장태. 1997.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우일. 2016.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판과 기독교계 참여 가능성에 대한 탐색”. 『신학과 실천』 52:799-825.
- 박지웅. 2019. “초연결사회 이전의 기존 연결사회의 기원과 사회성격”. 『사회경제평론』 32(3):1-50.
- 배은경. 2021.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페미니즘연구』 21(2):137-186.
- 백옥경. 2007. “조선시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화사학연구』 34:193-220.

- 백, 율리히. 2008.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다”. 조선일보 2008.4.1.
- 다카시, 사카가미. 1999. 『인구·여론·가족: 근대적 통치의 탄생』. 오하나 옮김. 서울:그린비. 2019.
- 성정현·김희주. 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33-58.
- 손호빈. 2016. “‘사랑’의 개념에 대한 고찰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을 중심으로”. 『인격주의 생명윤리』 6(2): 157-220.
- 손호성. 2023.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재고찰: 합계출산율 지표의 한계와 완결출산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4호(2023.12):215-241.
- 심지원. 2017. “초연결사회에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감성연구』 15집: 173-192.
- 양천수. 2016.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영남법학』 43호:209-239.
- 오은열·신준옥. 2023. “초연결사회와 스마트기술에 따른 4차산업혁명의 정책방향”. 『산업융합연구』 21(12):45-54.
- 유권중. 2019. “초연결사회와 유교적 진실의 재구성”. 『공자학』 36:155-192.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67-90.
- 이재현. 2020. 『사물인터넷과 사물철학: 초연결사회의 기술비평』.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정전. 2019.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서울:여문책.
- 이철희·황영지. 2022. “한국의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확대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45(2): 105-135.
- 이지용. 2021. “송출하는 몸과 수신되는 객체, 접속하는 관계맺기: 코로나19로 변화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몸”. 『팬데믹, 사이버스페이스+호모 마스쿠스』. 몸문화연구소. 서울:해결의 휴일.
- 장문현.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의 유형화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7(1):11-22.
- , 2022.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진단 모델의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1):11-23.
- 조명덕. 2010.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6(1):1-31.
- 조영태. 2016. 『정해진 미래』. 서울:북스톤.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서울:창비.
- 조일준. 2016.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인류의 이주 역사와 국제 이주의 흐름』. 서울:푸른역사.
- 주대영 김종기. 2014.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IoT)의 창조적 융합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pp.1-123.
- 주상현. 2021.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 실태와 정책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35(3):295-320.
- 푸코, 미셸.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심세광 옮김, 서울:난장.
- 푸코, 미셸. 2004.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서울:나남.
- 하정옥. 2015. “재생산의 문화변동과 국가의 개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 인구 정책의 한계”. 『한국여성학』 31(2):257-297.
- 하종원·김태완. 2021. “저출산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3):1213-1222.
- 황인도 외. 2024.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2023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 중장기 심층연구』.
- 함인희. 2013. “국가후원 가족주의(State-sponsored Familism)에 투영된 역설: 싱가포르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2):1-28.
- 현상윤. 2010. 『조선유학사』. 서울:삼산출판사.
- Adler, Joseph A. 2003. “Review: the Confucian Body.” *China Review International* 10(2):351-362.
- Azzi, Corry and Ronald G. Ehrenberg. 1975. “Household Allocation of Time and Church Attend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1): 27-59.
- Baudin, Thomas. 2015. “Religion and Fertility: The French connection.” *Demographic Research* 32: 397-420.
- Boero, Natalie and Katherine Mason. 2021. *The Oxfor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Body and Embodi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akley, Sarah (ed). 1997. *Religion and Body*. New York,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g, Yen-hsin Alice. 2020. “Ultra-low fertility in East Asia: Confucianism and its discon-

- tent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8: 83–120.
- D’Antonio, William V. 1980. “The Family and Religion: Exploring a Changing Relationship.”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9(2): 89–104.
- Davie, Grace. 2005. “From Obligation to Consumption: A Framework for Reflection in Northern Europe.” *Political Theology* 6(3): 281–301.
- , 1990. “Believing without Belonging: Is This the Future of Religion in Britain?” *Social Compass* 37(4): 455–469.
- Dharmalingam A. & S. Philip Morgan. 2004. “Pervasive Muslim-Hindu Fertility Differences in India.” *Demography* 41(3): 529–545.
- Eliade, M. 1959.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이은봉(역), 서울:한길사. 2003.
- Endler, Rebekka. 2021. *Das Patriarchat Der Dinge: Warum die Welt Frauen nicht passt*. 『사물의 가부장제: 세계는 왜 여성에게 맞지 않을까』. 이기숙 (역). 서울:그러나. 2023
- Engels, Friedrich. 1981.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Marx-Engels-Werke Band 21).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역). 서울:아침. 1991.
- Habermas, Jurgen. 2006.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4(1): 1–25.
- Gesler, W. M. 1992.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Issues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Social Science & Medicine* 34(7):735–746.
- Geraci, Robert M. 2008. “Apocalyptic AI: Religion and the Pro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6(1):138–166.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UK: Polity Press.
- Johnson, T. M. 2004. “Demographic Futures for Christianity and the World Religions.”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43(1): 10–19.
- Jordan, L. M. 2006. *Religion and Demography in the United States: A Geographic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 Kuhn, Thomas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

- cago Press.
- Marcum, John P. 1986. "Explaining Protestant Fertility: Belief, Commitment, and Homogamy." *Sociological Quarterly* 27(4): 547-558.
- Mayer, Albert J. & Sue Marx. 1957. "Social Change, Religion, and Birth R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4): 292-290.
- Mellor, Philip A. and Chris Shilling. 1997. *Re-forming the Body: Religion, Community and Modernity*.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Mumford, Lewis. 1934. *Technics and Civilization*. 문종만 옮김. 서울:책세상. 2013.
-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Global Trends. 유지현·김수현 옮김(2025).
- Shilling, Chris. 1993. *The Body and Social Theory* (Theory, Culture & Society Series). London, Newbury Park, New Delhi: Sage Publications Ltd.
- Lévi-Strauss, Claude. 1996 (1962). *The Savage Mind*. 안정남 옮김. 서울:한길사.
- Turner, Bryan S. 1996. *The Body and Society: Explorations in Social Theory*. London: Sage. 『몸과 사회』 임인숙 옮김. 서울:몸과 마음. 2022.
- _____. (ed). 2012. *Routledge Handbook of Body Studies*. New York: Routledge.
- Verter, Bradford. 2003. "Spiritual Capital: Theorizing Religion with Bourdieu against Bourdieu." *Sociological Theory* 21(2):150-174.
- West, Christopher. 2003. *Theology of the Body Explained: A Commentary on John Paul II's "Gospel of the Body"*. Leominster, UK:Gracewing Publishing.
- Westoff, Charles F. & Elise F. Jones. 1979. "The End of "Catholic" Fertility." *Demography* 16(2): 209-217.
- Westoff, Charles F.& Emily A. Marshall. 2010. "Hispanic Fertility, Religion and Religiousness in the U. 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9(4): 441-452.
- Whitehead, Alfred North. 1996. *Religion in the Making: Lowell Lectures 1926*.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나가는 말: 다시 공동체를 상상하기

김종만(경희대)

한국 사회의 인구감소는 단순한 수적 문제나 정책적 실책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방식, 인간이 관계를 맺고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 변화의 신호이다.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단지 ‘출산 장려’라는 기술적 해결책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왜 공동체의 재생산이 좌절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직면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서 이 책은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가치의 전환과 ‘가족’의 재구성”이다. 이 책에서 다룬 다양한 논의들은 저출산이 단순한 생물학적·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전환과 깊이 얽혀 있음을 드러낸다. 가족은 더 이상 의무적 소속이나 재생산의 장이 아닌, 개인적 선택과 감정적 만족의 공간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값을 매길 수 없어 값비싼 아이』에서 보았듯, 아이는 과거와 같은 경제적 자산이 아닌 감정적 존재로 재구성되었고, 그로 인해 양육은 부담으로, 부모됨은 선택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한국 사회 역시 가족주의가 약화되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은 점점 개인의 ‘삶의 의미’와 결부된 선택이 되고 있다.

둘째는 “젠더 불평등과 돌봄의 위기”이다. 초저출산 담론의 많은 부분이 간과해온 지점은 돌봄 노동의 성별화 문제다. 이 책이 비판한 ‘인구 위기 주류 담론’은 여성의 출산을 전제하면서도, 여성의 노동권, 사회적 안전망, 돌봄 분담에 대한 고민은 미비하다.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기업문화가 여전히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한,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출산과 육아는 특정 젠더에게 부과된 ‘희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공동 책임임을 제도적으로 실현해야만 인구감소에 대한 진정한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는 “종교의 재배치와 신앙의 재구성”이다. <인구 혁명과 종교 지형>의 서평에서 보여주듯,

인구구조의 변화는 종교 지형의 재배치를 야기한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 중심 종교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상상력, 개별성과 정서적 연결을 중시하는 신앙의 형태가 부상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 몸과 관계, 소속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종교적 실천은 오히려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을 품고 있다.

넷째는 “다문화사회와 새로운 ‘우리’의 상상”이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의 인구 재구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타자화’된 존재로 머물고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생활문화』는 통합적 문화 적응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지만, 정책적 시선은 여전히 이들을 노동력이나 인구 자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출신과 언어, 피부색이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의 윤리를 중심에 두는 상상력이다.

다섯째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공동체”이다. 결국,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과제는 ‘얼마나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 것인가’이다. 사람들은 단지 혜택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살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이 책이 제안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다음의 윤리를 중심으로 상상된다. 첫째, 분담의 윤리이다. 돌봄과 생애 노동의 부담을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누는 구조이다. 둘째, 다양성의 윤리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삶의 경로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문화이다. 셋째, 감정의 윤리이다. 사랑, 소속, 의미가 실감나게 경험되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이다. 다섯째, 정의의 윤리이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제도적 정의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과거의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실된 미래를 되찾기 위해, 새롭게 ‘발명’되어야 할 미래의 공동체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삶의 질과 관계의 깊이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해야 한다. 줄어드는 세계 속에서, 더 깊이 연결되는 공동체를 다시 상상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독자에게 남기고자 하는 마지막 제안이다.

초저출산 시대, 한국사회를 다시 묻다

저자
(가나다순)

김은기(고려대)
김종만(경희대)
박선경(고려대)
유광석(경희대)
이소훈(고려대)
최현우(서울교대)
한정선(고려대)

발행일 | 2025년 04월 30일

편집 | 도서출판 안복스

I S B N | 979-11-89850-88-3 (95060)

표지 디자인 | 도서출판 안복스(02-957-7780)

내지 디자인 | 도서출판 안복스(02-957-7780)